

탈북과 사회 적응의 통합적 이해 : 국내 탈북자를 중심으로*

윤인진(고려대 교수, 사회학)

1. 서론

1990년대 중반부터 증가하기 시작한 탈북자는 국내외적으로 중요한 사회 문제로 부상하고 있다.¹⁾ 중국, 러시아, 동남아시아, 몽고 등에서 체류중인 국외 탈북자의 수를 정확히 추정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대

* 본 논문은 2000년 5월 9일 숙명여대 통일문제연구소 교수학술세미나에서 발표된 논문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유익한 논평과 수정 방안을 제시하여 준 『현대북한연구』의 익명의 논평자들에게 깊은 감사를 표한다.

1) 북한을 이탈하여 한국으로 입국한 사람들을 정부에서는 ‘북한 이탈 주민’으로 호칭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 이탈 주민 본인들은 이 호칭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고 있으며, ‘귀순 동포’라는 호칭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호칭은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가치관과 정치경제적 이해 관계를 내포한다. 본 연구에서는 가능한 한 가치중립적인 입장을 견지하기 위해 사회적으로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호칭인 ‘탈북자’를 사용하겠다.

체로 5만 명에서 10만 명 선에 이를 것으로 연구자들은 추정하고 있다.²⁾ 이들은 불법 체류자의 신분으로서 인권과 생명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상태에서 생활을 연명하고 있으며, 갈수록 강화되는 중국과 러시아 정부의 탈북자 단속과 송환 조치에 오도가도 못하는 처지에 놓여 있다.³⁾ 1999년 11월에 북한을 탈출하여 중국을 거쳐 러시아로 밀입국하려다 체포되어 중국으로 송환된 후 다시 북한으로 강제 송환된 ‘7인의 탈북자 사건’은 남한, 북한, 중국, 러시아 정부 간의 정치·외교적 분쟁으로까지 비화되었던 경우였다. 이들은 유엔난민고등판무관(UHCHR)에 의해 난민으로 판정되어 러시아 당국의 출국 비자까지 받아 한국행이 성사되는 듯하였으나, 끝내 북한과의 관계를 고려한 러시아와 중국 정부에 의해 북한으로 송환되고 말았다. 처형이 확실시되는 상황에서도 이들을 사지로 돌려보낸 러시아와 중국의 비인도적인 처사에 대해 우리 국민과 전 세계의 인권 단체들이 분노하였고, 외교적 무능력을 보여준 우리 외교 당국에도 비난이 쏟아졌다. 이렇듯 탈북자들을 보호하는 것은 인도주의의 실천뿐만 아니라 동북아시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일이다.⁴⁾

5만 명에서 10만 명에 이르는 국외 탈북자의 수는 강력한 인구 압력으로 작용하여 남한으로 입국하려는 탈북자의 수를 계속해서 증가시킬 것이다. 실제로 최근 몇 년 사이에 입국하는 탈북자의 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1999년에는 148명이 입국하였고, 2000년에는 200명 이상이 입국하였다. 국내 거주 탈북자의 규모가 증가하면서 이들의 사회 적응 문제는 우리 사회의 중요한 사회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2000년 9월

2) 윤여상, “중국동북지역 탈북자 실태와 지원방안”(북한인권시민연합 학술토론회 발표문, 1998); “탈북자 적응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미간행 연구 논문, 1999).

3) 좋은 벗들, 『두만강을 건너온 사람들』(서울: 정토출판, 1999); 윤인진, “탈북자의 남한 사회 적응실태와 정착지원의 새로운 접근”, 『한국사회학』, 제33집(1999).

4) 이금순, “북한대학원 접경지역 탈북자 실태조사단 보고문 토론”(미간행 토론문, 1999).

30일 현재 1,282명에 이르는 국내 탈북자들의 사회 적응도 어려운 상황에서 매년 200여 명 이상의 추가적인 탈북자들의 입국은 탈북자 문제를 더욱 심각한 사회 문제로 만들 것이다.

많은 학자들이 지적하고 또 많은 국민들이 공감하듯이 탈북자의 남한 사회 적응은 단순히 탈북자 자신의 문제만이 아니라, 통일 후 남북한 주민간의 사회 통합의 예비 과정으로까지 확대해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⁵⁾ 북한 사회와는 판이하게 다른 남한 사회에서 탈북자들이 정착하면서 겪게 되는 문제점의 종류와 정도를 미리 알고 이들이 뿌리를 내리고 살 수 있도록 제반 여건을 마련하는 일은 통일을 준비하는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일이다.

그러나 아쉽게도 문제의 심각성에 비교해서 국내에서의 탈북자 관련 연구는 아직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지 못하다. 탈북자 연구를 자신의 주된 연구 주제로 삼고 지속적으로 연구 활동을 하는 학자의 수는 불과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이다. 연구의 양 문제 못지 않게 심각한 문제는 연구의 질이다. 아직 탈북자 연구가 본격화되지 않은 초기 단계라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앞으로 이 연구를 내실화하기 위해서 극복해야 할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

이 논문에서는 기존의 탈북자 연구의 한계점과 개선 방향을 지적하고, 탈북과 사회 적응을 통합적으로 설명하고 이해할 수 있는 모델을 개발하려고 한다. 그리고 이 모델에 기초해서 국내외 탈북자의 실태를 분석하고 바람직한 보호와 정착 지원의 방향을 모색해 보려고 한다.

5) 민병천, “월남귀순자의 자유사회적응과정 실태조사”(국토통일원 조사연구실, 1980); 오혜정, “귀순북한동포의 남한사회 적응실태”(서강대 정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5); 이장호, “북한 출신 남한이주자(탈북자) 문제의 사회통합적 대응”(크리스찬아카데미 남북 관계 대화모임 발제문, 1996); 이철우, “탈북 귀순자의 한국사회 적응력 제고에 관한 정책적 대응방안 연구”, 『통일정책분야 '96 북한 및 통일연구 논문집』(서울: 통일원, 1996); 전우택, 『사람의 통일을 위하여』(서울: 오름, 2000).

2. 기존 탈북자 연구의 한계와 개선 방향

기존의 탈북자 연구의 한계와 문제점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여기서는 대표적으로 이론 부재, 과학적 연구 방법론 결여, 구체성 결여, 탈북자 용어의 혼란 등의 문제들을 지적하고 개선 방향을 논의하도록 하겠다.

1) 이론의 부재

우리 사회에서 탈북자에 대한 관심은 학문적인 연구보다는 일부 종교 단체, 시민 단체들과 뜻있는 개인에 의해 탈북자의 인권 침해, 기아, 사회 부적응 문제를 사회에 알리는 일로부터 시작되었다. 대중 매체, 종교 단체, 사회 운동 단체는 르포성 보도를 통해서(예를 들어 ‘꽃제비’와 ‘인신 매매’ 보도) 탈북자 문제의 심각성을 일깨우려 하다 보니 과장 보도를 하기도 하고, 동포애 또는 민족 정서에 호소하는 감정적인 측면이 부각되었다. 그리고 현상에 대한 사려 깊은 분석과 진단보다는 즉각적인 실천을 추구하는 경향이 강했다.

탈북자의 규모가 증가하고 이 중에서 국내로 입국하는 사람들의 수가 늘어나고 이들의 사회 적응 문제가 제기되면서 정부와 정부 산하 연구 기관에서는 법적·제도적 대응책을 모색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통일연구원, 보건사회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등의 연구 기관에서는 탈북자 문제를 법적·제도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하는 행정적이고 기술적인 정책 및 프로그램 개발에 초점을 맞추어왔다.⁶⁾ 물론 탈북자

6) 선한승, 『북한 탈북노동자의 적응력 실태와 적응과제』(서울: 한국노동연구원, 1995); 김영수·정영국, 『탈북귀순자 남한사회 적응실태 조사』(서울: 통일연수원, 1996); 박

문제는 시급한 현안이기 때문에 즉각적이고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모색하고 실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 문제는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고 단기간에 해결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보다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접근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탈북자 연구를 사회학, 인구학, 심리학, 사회복지학, 정치학, 국제관계학 등의 사회 과학적 연구의 장으로 끌어들이며, 이미 축적된 사회 과학적 이론, 개념, 방법론 등을 활용하여 연구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일이 필요하다. 즉 탈북자 연구는 단지 인권 운동이나 시민 운동의 차원, 또는 정책 입안 차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사회 과학적 연구와 접목되어 현상에 대한 보다 체계적이고 심도 있는 접근이 되어야 한다.⁷⁾

종철·김영운·이우영, 『북한이탈 주민의 사회적응에 관한 연구: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6); 옥태완 외, 『북한 급변사태시 대량난민대책』(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6); 이정우·김형수, 『탈북이주자 사회 정착지원 개선방안』(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6); 이종훈, “탈북 북한주민 정책의 문제점과 향후 과제”, 『중앙대학교 민족발전연구회 주최 통일정책 대토론회 발표 및 토론 자료집』(서울: 중앙대학교, 1996); 제성호, “북한귀순자 보호 및 관리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형사정책연구』, 제7권(1996).

- 7) 김경만은 사회학 지식의 누적적 성장의 조건으로서 ① 사회학자의 역할 정체성(사회학자의 역할이 지식인이라는 포괄적이고 미분화된 것이 아니라 좁고 특정한 분야에서의 학문적 기여라고 생각하는 인식), ② 사회학자 집단과 대중의 유리(사회학자가 정치, 사회, 문화적 영향과 이해로부터 유리되어 학문 연구에 집중하는 것), ③ 상호감시하는 논쟁 집단의 유무, ④ 지적 생산물 시장의 구조(전문 학술지 유무), ⑤ 연구에 대한 보상 체계(사회학 연구 생산물의 평가가 학문외적인 기준(대중적 인기 또는 정치, 경제, 사회적 이해 관계)에 의해서가 아니라 순수한 학술적 평가에 의해 명성과 권위가 주어지는지의 여부), ⑥ 사회학자 집단 내의 계층화와 사회적 통제(평가와 보상이 사회학자 집단 내의 엄격하고 고유한 기준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학문적 수준에 맞는 연구물만 선택적으로 출판하고 공유하는지의 여부) 등을 들었다. 김경만, “사회학 지식의 누적적 성장은 가능한가?: 미국과 한국사회학에 대한 과학사회학적 분석”(고려대학교 사회학 콜로키움에서 발표된 논문, 2000. 3. 27). 이런 시각에서 볼 때 탈북자 연구에 있어서 필요한 과제는 연구 주제를 사회적 영향과 이해로부터 잠정적으로 분리하여 우선 학문적으로 심도 있게 분석하는 것이다.

2) 과학적 연구 방법론의 결여

연구 방법에 있어서도 개선할 사항들이 많다. 탈북자에 관한 과학적 분석보다는 시급히 문제 해결을 모색해야 하는 상황에서 연구 방법에 소홀했던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고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성급하게 내놓은 조사 결과와 정책 제안은 아무리 선의의 목적을 가졌다 하더라도 신뢰성을 잃어서 오히려 부정적인 반향을 일으킬 수 있다. 이러한 경우의 대표적인 예가 국외 탈북자의 규모를 둘러싼 정부와 민간 단체, 활동가, 학자들 간의 논란이다. 북한 동포와 탈북자를 지원하는 불교 단체인 ‘좋은 벗들’은 1998년 11월부터 1999년 4월까지 약 5개월 동안 중국 동북부 지역 2,479개 마을을 현지 조사하였다. 조사에 참여한 사람들은 불교 활동가 10여 명과 보조 조사원 30여 명이였다.⁸⁾ 그러나 탈북과 밀접한 분야인 국제 인구 이동, 난민, 민족 관계 등에 대해 전문가들의 참여가 부족한 상태에서 사회 조사 훈련을 체계적으로 받지 못한 활동가들에 의해 연구 설계, 자료 수집, 분석이 이루어짐에 따라 자료와 연구 방법의 신뢰성이 떨어지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 더욱이 재중 탈북자의 수가 최대 20만 명에 이른다는 주장은 추정 방법의 문제점과 함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학계와 탈북자 지원 민간 단체들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다.

북한 선교와 탈북자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의 경우도 ‘좋은 벗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 연합회의 선교팀은 현장에 있는 선교사, 조선족 사역자, 공안국 정보과 및 북한 보위부, 사회안전부 요원의 전언을 종합해서 최소 5만 명에서 10만 명의 탈북자들이 장기적으로 북한을 이탈해 방황하고 있다고 주장한다.⁹⁾ 그러나 이 추산도

8) 좋은 벗들, 『두만강을 건너온 사람들』.

9) 박요셉, “해외체류 탈북자 현황과 대책”, 『탈북자 문제 현황과 대책』(통일부·북한이

여러 채널을 통해 간접적이고 비체계적인 방식으로 얻어진 것이기 때문에 신뢰성에 있어서 여전히 문제를 안고 있다.

민간 단체들의 과대 추정과는 반대로 정부 기관은 탈북자 규모를 의도적으로 과소 추정하고 있다고 비판을 받고 있다. 국외 탈북자 문제를 담당하는 정부 기관인 외교통상부의 특수정책과는 2000년 3월 현재 국외 탈북자의 규모를 약 1만~2만 명으로 추산하고 있는데, 이것보다 조금 많게 추산한다면 UNHCR의 추산치인 3만 명까지 인정하겠다는 자세이다.¹⁰⁾ 이렇게 민간 단체와 정부 기관 간에 추산치가 큰 차이를 보이는 주된 이유는 탈북자를 정의하는 방식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정부는 탈북자를 크게 단기 체류자(식량 획득을 위해 수일 내지 수주 동안 중국에 체류 후 귀환하는 사람), 장기 체류자(중국 동포 친척 방문 등을 이유로 월경하여 상당 기간 중국 내에 불법 체류하는 사람), 탈북자(북한 귀환 의사가 없거나 돌아가지 못할 사정이 있어 일정한 거처 없이 장기간 은신, 도피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로 구분하고, 세번째 부류의 사람들만이 탈북자라고 규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민간 단체들과 개인 연구자들은 탈북자들이 처음에는 식량을 구한다는 단기 체류의 목적을 가지지만 체류 기간이 길어지면서 본의 아니게 장기 체류자가 되고, 그러다 보면 북한으로의 귀환이 현실적으로 어렵게 되어 탈북자가 되기 때문에 위와 같은 구분은 현실적으로 지키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또한 정부가 탈북자 규모를 축소 추산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책임을 모면하려는 의도이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북한이나 중국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의도라고 해석하기도 한다.

국내 탈북자와 관련한 연구에도 개선해야 할 문제점들이 많다. 탈북

탈주민지원 민간단체협의회 공동주최 워크샵, 2000), 10쪽.

10) 조백상, “해외체류 탈북자 문제 현황과 대책”, 『탈북자 문제 현황과 대책』(통일부·북한이탈주민지원 민간단체협의회 공동주최 워크샵, 2000), 4쪽.

자의 특수한 신분으로 인해 일반 연구자들은 연구 대상으로 탈북자를 쉽게 접근할 수 없었고, 비교적 큰 규모의 설문 조사는 통일부, 국정원, 보건사회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등의 국가 연구 기관에서 독점적으로 실행하였다. 그런데 국가 기관에서 실행하는 조사들은 대부분 시급한 행정적·정책적 문제 해결을 위한 목적으로 설계되어서 전반적인 탈북자의 생활 실태(제도적·경제적·심리적 분야 등)를 심도 있게 파악하기 어렵게 되어 있다. 그러다 보니 민간 연구자들은 소규모의 탈북자들을 다양한 통로를 통해서 확보하고 자신이 관심 있는 주제에 대해 자료를 수집해 왔다. 하지만 이런 방식으로 수집한 자료는 대부분 소규모의 비확률 표본이라 전체 탈북자 모집단에 일반화하기 어려운 신뢰성과 타당성 문제를 동시에 안고 있다.

또 한 가지 방법론적 문제는 탈북자의 사회 적응이라고 하는 것은 다차원적인 현상임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대부분의 연구는 연구 대상자에 대한 접근의 어려움, 연구 재원의 부족, 시간적 제약으로 인해 소수의 개인 학자들에 의해 단편적으로 진행되어 왔다. 그리고 특정 시점에서 한 번 연구로 종결되는 횡단적(cross-sectional) 연구가 전부였다. 이로 인해 정착 기간의 차이에 따른 적응 양상의 변화를 추적할 수 없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런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사회학, 심리학, 사회복지학, 정치학, 정신의학 등을 포함한 학제간 공동연구와 함께 동일한 연구 대상자를 여러 시점에서 반복해서 조사하는 종단적(longitudinal) 또는 패널 조사를 실행해야 한다. 이렇게 해서 수집된 자료는 일부 연구자들만이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베이스화해서 많은 연구자들이 다양한 주제를 다양한 시각에서 연구할 수 있게끔 하는 공동체 문화를 형성해야 한다.

3) 구체성 결여

탈북자 연구 축적이 일천한 단계에서 어느 한 분야를 심도 있게 연구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다 보니 기존 연구의 대부분은 탈북자들의 전반적인 사회 적응의 수준과 문제점들을 점검하는 총론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로 인해 구체적인 주제들에 관한 심도 있는 연구가 부족하고 총론적인 수준에서 동일한 자료와 유사한 해석 및 정책 제안을 반복하고 있다. 반복된 공개 토론회나 워크숍에서 통일부나 외교통상부의 대표자들은 국내 탈북자의 규모와 특성에 관한 자료를 업데이트하고 정부의 탈북자 정책을(또는 정책 부재를) 홍보 또는 옹호하는 데 그치고 있다. 연구자들 역시 국외 탈북자의 인권 침해 상황이 심각하다거나 국내 탈북자의 사회 적응이 어렵다는 사실을 밝히는 데 그치고 있다. 그로 인해 아무리 탈북자 실태 조사가 반복되어도 연구의 축적이 미비해지고 조사에 응하는 탈북자들은 자신들의 문제 해결에 실질적인 도움이 안 된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는 탈북자의 사회 적응에 있어서 중요한 이슈에 대해서 이슈별로 경험적이고 구체적인 연구를 통해 연구 결과를 축적해 나가야 하겠다. 예를 들어 최근 가족 동반 입국이 증가하면서 청소년 세대와 장년 세대가 한 가정에서 거주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이로 인해 세대 갈등 문제, 부부갈등문제, 청소년의 학교 적응과 진로 선택 문제 등이 새로운 문제로 부상하고 있고 이에 대한 경험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국내 노동 시장에서의 불리한 위치로 인해 탈북자들 중에 자영업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는데 탈북자 자영업의 특성, 문제점, 개선방안 등에 관한 경험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그리고 탈북자의 사회 적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영역인 취업 및 직장 부적응의 원인을 진단하고 직장 적응력을 향상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듯

이제는 원론적인 수준에서의 논의가 아니라 각론으로 들어가 연구가 세분화되고 연구자들간에 역할 분담 내지 전문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최근 들어서 탈북 가족의 사회 적응과 여성의 역할,¹¹⁾ 탈북 여성의 사회 적응력,¹²⁾ 탈북 청소년의 사회 적응 능력,¹³⁾ 탈북자 자영업,¹⁴⁾ 탈북자 직장 부적응¹⁵⁾ 등의 세분화된 주제들에 대한 경험적인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다.

4) 탈북자 용어의 혼란

탈북자를 호칭하는 용어는 시기적으로 변화하여 왔고 아직까지 통일된 용어가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 탈북자를 호칭하는 용어는 과거 군사정권 시절에는 ‘귀순 용사’로 쓰이다가 ‘귀순 동포’ 또는 ‘귀순자’로 대체되면서 가치 평가적인 함의가 상실되었다. 그런데 귀순이라는 용어는 ‘반항심을 버리고 복종함’ 또는 ‘반항하거나 반역하는 마음을 버리고 스스로 돌아서서 따라오거나 복종함’이라는 의미를 갖기 때문에 탈북자들에게 거부감을 주었다.¹⁶⁾ 이로 인해 1997년에 ‘귀순 북한 동포’라는

11) 장혜경·김영란, 『탈북자 가족의 사회적응과 여성의 역할』(미간행 연구 보고서, 2000).

12) 박현선, 『남북한 여성 사회통합 프로그램 연구 : 여성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력 제고 프로그램 개발』(서울 : 통일부, 2000).

13) 북한인권시민연합, “탈북청소년의 사회적응능력 향상을 위한 통합적 지원프로그램” (미간행 연구 계획서, 2000).

14) 윤인진, “북한이탈주민 자립·정착을 위한 자조모델 연구-효과적 자영업기반 형성을 중심으로”, 『'99 신진연구자 북한 및 통일관련 논문집』(서울 : 통일부, 1999), 119~163쪽.

15) 윤인진, 『북한이탈주민의 직장부적응 문제 조사 및 적응력 향상 방안 연구』(서울 : 통일부, 2000).

16) 김명세, “탈북자의 사회적응은 민족화합의 예비과정”,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연구

용어는 ‘북한 이탈 주민’이라는 가치 중립적인 용어로 바뀌었다. 그러나 북한 이탈 주민이라는 용어 역시, 탈북하여 국내에 정착하는 사람들과 중국이나 러시아 등지에서 체류하는 사람들을 구분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고, 탈북과 남한 사회 적응 과정에서의 탈북자 스스로의 의도적이고 주체적인 선택이 배제된 인상을 준다.¹⁷⁾ 더욱이 이 용어는 북한을 이탈했다는 객관적인 사실만을 부각시킬 뿐,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우리는 어떤 이유로 이들을 지원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지시를 주지 못한다. 또한 이 용어는 이들이 아직도 남한 사회의 정식 주민으로서 정착하지 못하고 주변부에서 곁들고 있다는 인상을 주고 있다. 같은 맥락에서 우리 사회에서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탈북자’라는 용어도 이들이 우리 사회에서 구별되는 소외계층의 이미지를 강하게 내포하고 있다.

탈북자라는 용어를 영어로 번역할 때 문제는 더욱 심각해진다. 탈북자는 보통 defector(귀순자), refugee(난민), escapee(탈출자), border-crosser(월경자) 등으로 번역되는데, 각자 의미하는 바가 다르고, 어떻게 번역하느냐에 따라 우리가 이들을 지원해야 하는 정당성과 방법이 크게 달라진다. 또한 앞에서 설명하였듯이 탈북자는 하나의 동질적인 집단이라기보다는 크게 세 가지의 이질적인 집단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defector, refugee, escapee, border-crosser 등의 용어는 이러한 내부적 차이를 포착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더욱이 중국과 러시아 등지의 재외 탈북자 문제는 주변국간의 외교적 이해 관계가 첨예하게 달려 있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 탈북자를 명명할 수 없는 문제점도 있다.

현상을 일반인보다는 보다 객관적이고 체계적으로 분석해야 하는 연

총서』, 2권(서울: 오름, 1996).

17) 독고순, “비교문화적 관점에서의 탈북주민 적응연구”(연세대학교 대학원 사회학과 박사학위논문, 1999), 74쪽.

구자들도 용어의 혼란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아직까지 연구자들은 각자 선호하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 탈북자 문제의 접근 방식과 해법도 상이하게 제시하고 있다. 최근 발표된 연구물들의 제목에서 사용된 탈북자 용어는 ‘탈북 귀순자’, ‘탈북 이주자’, ‘탈북 주민’, ‘남한 이주 북한 이탈 주민’, ‘남한 이주자’, ‘북한 출신 남한 이주자’, ‘북한 출신 주민’, ‘남한 이주 북한 동포’, ‘탈북 북한 주민’, ‘북한 이주민’, ‘북한 탈출 동포’, ‘북한 이탈 주민’ 등 실로 다양하다.¹⁸⁾ 더욱이 동일한 연구자의 연구물들에서 사용된 용어들이 수시로 변하는 경우도 적지 않게 나타나고 있다.

용어는 그것의 대상이 되는 사람과 그것을 호칭하는 사람과의 관계를 규정하는 특성을 갖고 있다. 탈북자를 호칭하는 용어가 혼란스럽게 사용되고 있는 것은 탈북자와 남한 주민과의 관계가 그만큼 정립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도 생각한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우리 사회가 탈북자들에게 그들의 정체성 및 정착 방식과 관련하여 혼합된 신호(mixed signal)를 주고, 그로 인해 자신과 남한 사회에 대해서 양가 감정(ambivalence)을 갖게 하고 있다. 즉 본인이 실향민이나 외국인 노동자라고 생각한다면 애초에 정부에 기대할 것도 없겠지만, 탈북자라는 특수

18) 이종훈, “북한 탈출동포의 보호문제”, 『현안분석』, 제80호(국회입법조사분석실, 1994) ; 제성호, “북한탈출동포의 법적 지위와 처리방안”, 『북한연구』, 제5권 3호(1994) ; 김영수·정영국, 『탈북귀순자 남한사회 적응실태 조사』 ; 이장호, “남한 이주자(탈북자)의 사회적응을 위한 체계적 접근”, 『탈북자 지원을 위한 대책과 과제』(서울 : 크리스찬 아카데미, 1996) ; “북한출신 주민(탈북자 포함) 심리사회 적응 프로그램의 개발”, 『성곡논총』, 제28집 4권(1997) ; 이정우·김형수, 『탈북이주자 사회정착지원 개선방안』 ; 이소래, “남한 이주 북한 이탈 주민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석사학위논문, 1997) ; 정영화, “북한이주민의 한국사회동화를 위한 법제도론”, 『통일연구』, 제2권(1997)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탈북이주자 사회정착지원 개선방안』(서울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8) ; 독고순, “비교문화적 관점에서의 탈북주민 적응연구” ; 김학성, “북한이탈주민(탈북이주자)의 남한사회적응에 관한 연구”(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정책학전공 석사학위논문, 2000).

한 신분이 이들로 하여금 정부에 보상과 배려를 기대하게 만들고 그만큼 자립 정착의 의지를 약화시킨다.

앞으로 탈북자 연구의 발전을 위해서는 탈북자 용어의 표준화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연구자, 탈북자, 정부, 민간 단체가 공동으로 참여하여 현실적인 국내외적 상황을 고려하면서 상호 공감할 수 있는 용어를 찾아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탈북자와 우리 사회와의 관계가 정립되어야 할 것이다. 앞으로 이 과제를 놓고 더욱 심도 있는 연구가 뒤따라야 하겠지만 일단 이 논문에서는 다음과 같은 기본 원칙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탈북자는 남한 주민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이들이 북한 출신이라는 이유로 부당하게 사생활과 행복 추구권을 침해받아서는 안 된다.¹⁹⁾ 둘째, 북한에서의 계층과 배경 특성, 탈북 동기나 경로 등과 상관없이 일단 입국한 탈북자는 동등하게 취급받아야 한다. 셋째, 탈북자는 새로운 체제에서 적응해야 하기 때문에 초기 정착 단계에 필요한 물질 토대를 마련하고, 자립 정착의 기회 구조를 제공받을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지원은 한시적이어야 하며 자기 책임성을 증대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 탈북자는 민족적 과제인 남북 통일을 준비하고 통일 후 남북한 주민간의 사회문화적 통합을 이끌 통일 역군이라는 차원에서 이들의 경험과 역량을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탈북자들이 남한 사회에서 현실적이고 객관적인 현실 인식을 갖고 자립 정착의 길을 모색하는 동시에 자신들이 통일을 준비하는 역군으로 이바지할 수 있다는 자부심을 갖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탈북자를 호칭하는 용어는 위와

19) 대부분의 탈북자는 국내 입국 후 2년 동안은 해외 여행이 금지되고, 그 후라도 단수비자만이 발급되고 귀국 후에는 여권을 국가정보원에 보관해야 하는 불편을 감내하고 있다. 이러한 통제는 해외 무역을 통해 자립 정착의 토대를 마련하려는 탈북자들에게 넘기 어려운 장벽이 되고 있다. 이러한 정부 기관의 자세는 기본적으로 탈북자를 남한 주민으로서 100%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낸다.

같은 원칙들을 반영할 수 있는 방향에서 정해져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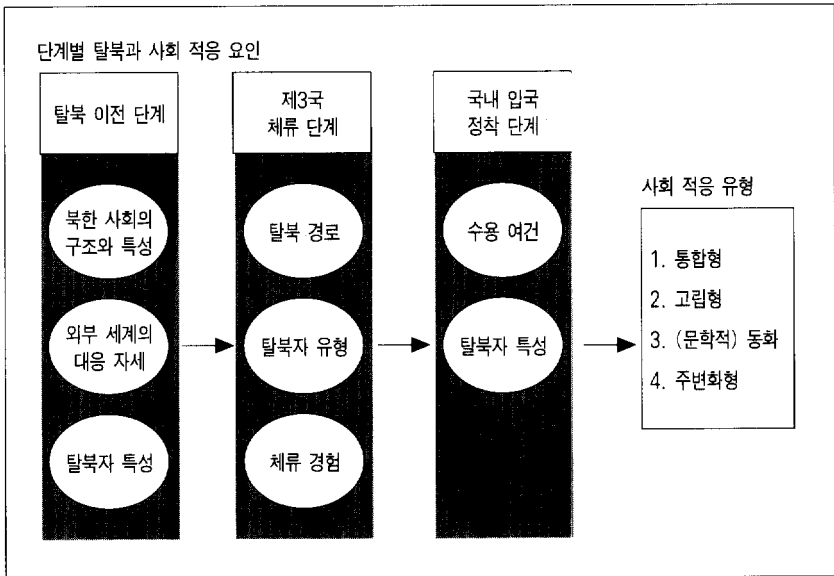
3. 탈북과 사회 적응의 통합 모델

탈북자가 탈북을 결심하고 중국이나 러시아 등지로 월경을 하고, 일정 기간 체류를 한 다음 국내로 입국하고, 국내에서 사회 적응을 하는 과정은 서로가 긴밀히 연결된 과정들(interlinked processes)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연구에서는 이러한 과정들의 연결 고리를 연구하지 못하고 개별적인 과정들로 분리하여 연구하였다. 그래서 연구자들은 국외 탈북자 전문가와 국내 탈북자 전문가로 양분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역할 분담이 된 것은 무엇보다 국내의 탈북자 실태를 두루 알 수 있는 전문가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탈북 이전 단계의 요인들, 제3국 체류 단계의 요인들, 국내 입국과 정착 단계의 요인들을 서로 긴밀하게 연관시켜 그것들간의 관련성을 분석하고, 각 단계에서의 경험이 결과적으로 사회 적응의 유형과 수준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이 글에서 비록 실험적이지만 탈북과 사회 적응을 통합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모델을 제시하려고 한다. <그림 1>에서는 단계별로 탈북과 사회 적응에 관련된 요인들을 설명하고 각 요인들의 상호 작용 결과로서 사회 적응의 유형이 어떻게 나타날 수 있는지를 설명하였다.

이 모델의 특징은 탈북 경험과 사회 적응을 단계별로 나누고 한 단계에서의 요인들이 다음 단계의 요인들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하는 데 있다. 그리고 사회 적응을 물질적(경제적) 적응과 정신적

(심리적) 적응으로 구분하여 이 두 영역의 조합으로 네 가지의 상이한 적응 유형을 제시하고 있다.

〈그림 1〉 탈북과 사회 적응의 통합 모델



1) 탈북 이전 단계의 요인

탈북 이전 단계에는 ‘북한 사회의 구조와 특성’, ‘외부 세계의 대응 자세’, ‘탈북자의 특성’이 중요한 요인들로 작용한다. 이러한 요인들이 탈북의 규모와 동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1) 북한 사회의 구조와 특성

북한 사회의 구조 및 특성과 관련된 세부 요인으로는 북한의 경제 상태, 사회 통제 상태, 사회 계층구조, 북한 주민의 인성 구조와 특성 등이 있다. 즉 북한의 경제 수준과 사회 통제 수준의 변화에 따라 탈북자의 규모가 달라질 수 있다. 1995년 대홍수로 인해 북한의 식량난이 극도로 악화되자 이듬해인 1996년과 1997년 사이에 가장 많은 탈북자가 발생한 것도 그 이유이다. 1998년과 1999년에 탈북자의 체포와 처벌을 강화하게 되자 그 이후로 탈북자의 규모가 줄어들었다. 그러다가 2000년 초에 북한에서 식량 배급을 잠시 중단하자 탈북자의 수가 다시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북한은 밖으로는 무계급 사회, 평등 사회라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남한보다 더욱 엄격한 신분제 사회이다. 북한은 북한 주민 전체를 3개 계층(핵심, 동요, 적대), 51개 성분으로 분류하고 동요 계층에 속하는 사람은 교양 포섭하고, 적대 계층에 속하는 사람은 제재를 가하는 정책을 취하고 있다. 적대 계층에 속하는 사람은 북한에서 본인뿐만 아니라 자녀들까지도 신분 상승의 기회가 막힌 사람들이다. 따라서 이들이 탈북하려는 동기는 타계층보다 강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그렇지만 탈북해서 국내로 입국하는 과정까지는 자금, 연줄, 판단력 등과 같은 경제적·사회적·인적 자원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런 자원으로의 접근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핵심 또는 동요 계층의 사람들이 국내 탈북자들 중에 높은 비율로 포함될 수도 있다.

국내 탈북자의 북한에서의 사회 경제적 배경과 특성을 살펴보면 어떤 계층이 탈북자 중에 어떤 비율로 포함되어 있는지를 판별할 수 있다. 북한이탈주민후원회의 1999년 7월 현재 국내 탈북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북한에서의 직업에 대해서 응답한 총 764명의 직업 분포는 하

급 관리직(32.5%), 생산직(19.6%), 공직원(9.6%), 학생(10.9%), 농어업(6.4%), 기술직(5.9%)의 순이었다.²⁰⁾ 소위 전문직 또는 화이트칼라라고 부를 수 있는 고위 관리직과 사무직에 종사했던 사람들의 비율은 8.2%에 불과했다. 또한 1994년부터 1998년 사이에 입국한 탈북자 중에서 203명(60세 이상의 노약자, 유아, 초중고등 학생, 주부 등의 비경제 활동 인구 제외)을 표본으로 선정하여 조사한 김학성(2000)의 연구에 따르면, 중고등 학교 학력 소지자가 123명으로 전체 표본의 60.6%를 차지하고, 전문대학교 학력 소지자는 41명으로 20.2%를 차지한 반면, 대학교 이상의 학력 소지자는 39명으로 19.2%에 해당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렇게 직업과 학력을 고려해서 북한에서의 계층 지위를 추정한다면 많은 수의 탈북자들이 북한에서 동요(기본) 계층에 속했었고, 그 다음으로 적대 계층과 핵심 계층의 순서로 대표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북한 주민의 인성 구조 및 특성과 관련해서는 전체주의적이고 집단주의적인 북한 사회에서 형성된 북한 주민의 인성 구조와 특성이 국내 입국 후 개인주의적이고 자본주의 경제 체제의 남한 사회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오랜 기간 사회주의 체제에서 살아온 이들이 갑작스럽게 남한의 자유주의와 자본주의 체제에서 살게 되면서 사고의 전환이 순조롭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 이들은 서로 공존할 수 없는 감정, 생각, 인식, 충동이 마음속에 공존하는 심리적 갈등 상태를 겪게 된다. 예를 들어 북한에서는 돈(자본)이 다른 사람들의 노동을 착취해서 버는 것으로 본질적으로 더럽고 악한 것으로 교육받았지만, 남한 생활에서는 돈이 없으면 살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면 심리적 갈등에 빠지게 된다. 특히 탈북자 자영업자들은 돈을 벌기 위해 장사를 시작했으면서도 돈을 벌기 위해 거짓말도 해야 하고

20) 윤인진, 『북한이탈주민의 직장부적응 문제 조사 및 적응력 향상 방안 연구』.

자신의 양심을 속여야 하는 일들이 매우 힘들다고 토로한다. 이와 같은 양가 감정은 돈에 대한 태도뿐 아니라 자신을 특별한 사람인지 보통 사람인지, 남한 정부와 사회에 의존할 것인지 독립할 것인지, 두고 온 가족들을 잊어버릴 것인지 기억할 것인지, 자신이 남한 사람인지 북한 사람인지와 같은 문제에 대해서도 심리적 혼란과 갈등을 겪게 된다.²¹⁾

난민이나 이민자와 같이 자신들이 익숙한 환경을 떠나 새로운 환경에서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은 문화적 공백 상태에서 시작하기보다는 자신들이 교육받고 살아 온 경험 자체를 ‘문제 해결의 방식’으로 활용하는 경향이 있다. 즉 탈북자들은 남한 생활의 적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차적으로 ‘북한식으로’ 해결하려는 경향이 있다.²²⁾ 북한적 특징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²³⁾ 여기서는 국가에의 의존성, 사무직의 선호, 평등의 강조 등의 문제를 지적하고자 한다.

북한은 전체주의적인 사회이기 때문에 국가가 개인의 직업, 주거, 의료, 교육, 식생활 등과 같은 일상생활의 많은 영역을 통제하면서 동시에 책임진다. 이러한 체제에 익숙했던 탈북자들은 국내에서의 취업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자신의 취업 능력을 향상하기보다는 우선 정부가 적극적으로 취업을 알선할 것을 요구한다. 이들의 시각에서는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자기들과 같은 소수의 사람들의 취업 문제는 하루 아침에 해결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주위에서 국정원, 국방부, 통일부, 경찰 등에 의해 낙하산식으로 농협, 축협, 한국통신, 한국전력

21) 전우택, “남한에 있는 탈북자들의 심리적 갈등 구조 및 그에 대한 해결 방안”, 『탈북자의 보호 및 국내 적응 개선방안, 제32회 국내학술회의 발표논문집』(서울 : 민족통일연구원, 1999).

22) 전우택, 『사람의 통일을 위하여』, 26쪽.

23) 탈북자의 북한적 특징으로는 흑백 논리적 태도, 타협을 비겁함으로 보는 태도, 가치 중립적 존재에 대해 인정을 못하는 것 등이 포함된다. 전우택, “탈북자들의 주요 사회배경에 따른 적응과 자아 정체성에 관한 연구”, 『통일연구』, 제1권 2호(1997).

등과 같은 국유 기업체에 동료 탈북자들이 취업하는 것을 보게 되면 자신들에게도 그와 같은 혜택을 줄 것을 요구하게 된다. 그러다 보니 대학에 진학하거나 직업 훈련을 받아 자신의 인적 자본을 증대시키는 정공법을 선택하기보다는 연줄을 찾아 좋은 직장에 취업하려는 기회주의적 사고가 팽배해지는 것이다.

노동자계급을 영도적인 계급으로 찬양하는 북한의 사회 기조와는 달리 남한에서는 육체 노동직이 경멸되고 정신 노동직에 대한 선호가 우선적이며, 그것도 권력 조직과 관련된 직종이 최고 인기를 얻고 있다. 이러한 고정관념으로 인해 탈북자들은 자신들의 경력, 남한 사회에서의 기회 구조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단 사무직에 종사하려고 한다. 그러나 이들에게 주어질 수 있는 직업기회는 단순 노동직, 서비스직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수요와 공급 사이에 격차가 발생하여 이들의 실업률이 증가하는 결과로 나타난다. 현재 국내 탈북자의 실업률은 표본 조사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대체로 40% 정도로 높은 수준이다.²⁴⁾ 이렇게 높은 실업률에도 불구하고 많은 수의 탈북자들은 육체 노동직을 기피하고, 육체 노동직이라 하더라도 임금이 월 150만 원 정도가 되지 않으면 기회가 주어져도 선택하지 않으려는 성향을 보이고 있다. 물론 목숨을 건 탈북에 대한 보상과 탈북자라는 특수 신분에 대한 배려라는 측면을 전혀 무시할 수는 없지만, 국내 노동자들의 노동 여건을 감안한다면 탈북자들이 비현실적으로 높은 기대 수준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탈북자의 남한 사회 적응 문제에 있어서 중요한 해법 중의 하나는 바로 탈북자들의 기대수준을 현실적인 수준으로 전환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24) 선한승, 『북한 탈북노동자의 적응력 실태와 적응과제』; 이정우·김형수, 『탈북이주자 사회정착지원 개선방안』; 이영일, “탈북자 설문조사 보도자료”(미간행 보도자료, 1998); 윤인진, “탈북자의 남한사회 적응실태와 정착지원의 새로운 접근”.

또 한가지 탈북자의 남한 사회 적응을 어렵게 만드는 심리적 요인은 강한 평등 의식이다. 북한에서 상대적으로 평등한 직장에서의 상사-부하관계에 익숙했던 탈북자들이 남한의 권위주의적이고 위계적인 관계에 적응하지 못하고 반목과 갈등을 보이다가 결국 직장을 그만두는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 또한 북한에서 억눌렸던 물질적 욕구가 남한에 와서 갑작스럽게 분출하면서, 남한 사람과 같은 수준의 생활을 기대하는 것도 이들이 제자리를 찾는 데 장애가 되고 있다. 이들은 동료 탈북자들과의 비교에도 매우 민감한데, 누가 농협과 같은 안정된 직장에 취업하게 되면 자신들에게도 그런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동료 탈북자가 조건이 좋은 직장으로 옮기면 자신도 그곳으로 옮기려 한다든가, 자신의 능력과 조건을 고려하지 않고 공통적으로 월 150만 원 이상의 급여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자신들에게 현실적으로 주어진 기회 구조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려는 의식을 약화시킨다.

(2) 외부 세계의 대응 자세

외부 세계의 대응 자세는 중국, 러시아, 몽고 등 제3국이 탈북자의 입국이나 체류, 북한으로의 송환, 난민 지위 부여, 한국으로의 입국을 허용하려는 의도 및 행동과 관련된 것이다. 중국 정부는 탈북자를 단순히 식량을 구하러 밀입국한 사람으로 간주하고 이들을 난민으로 인정하려 하지 않으며, 북한과 중국 간에 체결된 ‘중국·북한 범죄인상호인도협정’(일명 밀입국자 송환협정)에 따라 북한으로 강제 송환하고 있다. 탈북자로 인해 중국 내에 사회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경계하고 북한과의 외교적 관계를 증시하는 중국 정부의 입장으로 보아서 탈북자를 북한으로 송환하는 정책은 지속될 것으로 예측된다. 2000년 4월에는 북한으로의 송환을 거부하는 탈북자 수십 명이 중국 투먼(圖們)의 수용소에

서 폭동을 일으켜 다수의 수용소 간수를 인질로 잡고 있다고 일본의 탈북자 지원 단체가 4월 20일에 밝혔다. 폭동에 가담한 탈북자들은 자신들을 북한으로 돌려보내지 말라고 요구했으며, 수용소측은 중국당국에 증원 병력을 요청하고 수용소 주위에 경계령을 내린 채 대처하고 있다. 이번 사태에 대해서 북한 당국은 중국 당국이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주시하고 있다고 발표함으로써 중국에 무언의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 이번 사태를 보도한 ‘북한인민구출긴급행동위원회(RENK)’[대표 이영화 간사이(關西)대 교수]는 세계 여론에 탈북자 강제 송환을 금지하는 데 동참할 것을 호소하고 있다. 그러나 남한 당국은 어떠한 입장 표명도 자제하고 사태를 관망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러시아는 탈북자 문제에 대해서 한국 정부의 개입을 원하지 않으며, 이 문제는 기본적으로 북한과 러시아 간의 문제라고 인식하고 있다. 그래서 북한과 협력하여 탈북자를 체포하여 북한으로 송환하기도 한다. 그러나 러시아는 중국과 달리 UNHCR 등의 국제 인권 단체를 무시할 수 없는 처지이며, 1990년대 초부터 형성된 우호적인 한·러 관계를 고려하여 처벌이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탈북자를 북한으로 강제 송환하는 일은 자제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1999년 12월에 발생한 ‘7인의 탈북자 사건’의 경우처럼 외교 문제로 비화된 사안에 대해서는 한국으로도 북한으로도 보내지 않고 이들이 거쳐온 중국으로 되돌려보냄으로써 직접적으로 개입하지 않으려는 자세를 취하고 있다. 이렇게 중국과 러시아 행이 어려워지자 탈북자들은 중국을 가로질러 몽고로 밀입국해서 그곳에서 한국행을 택하는 경우가 최근 들어 늘어나고 있는데, 몽고 정부는 한국과 보다 긴밀한 경제 관계를 발전시키고 싶기 때문에 이들의 한국행을 보다 수월하게 허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정부의 대응 자세 역시 국내로 입국하는 탈북자의 규모와 특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 김영삼 대통령은 러시아 별목공 출신 탈북자들의

비참한 실태와 인권 침해 사례가 보도되자 이들의 전원 수용을 천명하였고, 대통령의 강한 의지를 반영해서 러시아의 한국 대사관이 러시아 정부를 상대로 적극적인 외교 노력을 펼친 결과 이들 전원이 국내로 입국하였다. 이후 정부는 탈북자 전원 수용 원칙을 표방하였으나 실제로는 선별적으로 입국을 허용하였고, 일반 탈북자들은 한국 대사관에 찾아가도 협조를 얻지 못하고 자신이 알아서 한국행을 모색해야 한다.

국내의 민간 단체 중 한국기독교총연맹이나 탈북난민보호 유엔청원 운동본부와 같은 단체들은 중국의 탈북자들에게 난민 지위를 부여하자는 운동을 전개하기도 하지만, 현실적으로 중국 정부로 하여금 5만~10만 명의 탈북자에게 난민 지위를 부여하고 보호를 요구한다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된다. 또한 지금까지 단 한 명도 정치 망명자를 허용한 적이 없는 우리 정부가 다른 나라에 난민 지위를 부여하라고 요구하는 것도 위선적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탈북자들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한데, ‘일시 피난민’이라는 개념이 한 가지 현실적 대안이라고 볼 수 있다. 일시 피난민은 정치적 난민보다는 낮은 단계의 개념으로서, 관련 당사국의 합의하에 일반화된 갈등·분쟁 또는 인권 남용지역을 탈출한 피난민에게 보호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난민 보호상 의무인 난민 인정 절차와 난민의 제반 권리(교육, 복지, 노동권)에 대한 유보가 인정된다.²⁵⁾ 따라서 탈북자들의 다수가 정치적 망명이라기보다는 식량과 생필품을 구하기 위해 탈북했다는 점을 인정하고, 중국 정부로 하여금 중국 내 체류 희망자들에게 일시 보호를 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하여 탈북자의 강제 송환을 금지하고 이들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를 실시하도록 요청하며, 그에 필요한 경비는 우리 정부가 부담하는 방식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25) 이금순, “북한대학원 접경지역 탈북자 실태조사단 보고문 토론”.

할 것이다.

(3) 탈북자의 특성

위의 구조적인 요인들 이외에도 탈북자의 내적 특성(개인적 또는 가족적)이 제3국 체류 단계와 국내 입국·정착 단계에 큰 영향을 미친다. 탈북이 본격화되기 전에는 정치·사상적 동기와 신변상의 이유로 탈북하였으나, 1990년대 중반부터는 대부분이 식량난과 같은 경제적 동기로 탈북하기 시작하였다. 1990년대 후반에 들어서는 장기 체류 및 남한으로의 입국을 목적으로 가족과 함께 이탈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²⁶⁾ 그리고 1998년 이후로는 당원을 비롯하여 고급 간부, 기쁨조 출신, 사회안전부, 농장 지배인, 군인, 교수 등 하층민에서부터 고위층까지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탈북의 흐름에 가담하고 있다.²⁷⁾

무엇보다 북한 사회에서 한 개인과 가족이 차지하고 있는 사회 경제적 지위가 탈북의 경로, 탈북자 유형, 국내에서의 사회 적응에 큰 영향을 미친다. 북한 사회에서 엘리트 계층에 속한 사람들은 유학생, 외교관, 외화벌이 요원 등의 형태로 외국에 체류하다가 한국으로 망명하는 경우가 많고, 이들은 높은 인적 자원 수준과 자본주의 체제에의 사전 노출로 인해 국내에서의 사회 경제적 적응도 잘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반면 북한에서 하류계층이나 적대 계층에 속한 사람들은 식량을 찾아 중국이나 러시아 국경을 넘어 밀입국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이들은 국내로 입국하여도 사회 경제적으로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밝혀졌다. 즉 북한에서의 사회 계층이 남한에서도 재현되는 문제가 발생

26) 광해룡, “중국에 있는 북한이탈주민 인권실태에 관한 연구: 신(新)이산가족 현상의 발생을 중심으로”, 『평화문제연구』, 제12권 1호(2000), 248쪽.

27) 박요셉, “해외체류 탈북자 현황과 대책”, 9쪽.

하고 있다.²⁸⁾

북한에서 높은 지위에 있던 사람들이 남한에서도 높은 사회 경제적 지위를 유지하는 것은 이들이 입국시 지급받는 정착금과 보로금의 액수에서 낮은 계층의 사람들에 비교해서 높은 금액을 지급받는 것에 일부 기인한다. 그리고 이들은 국정원, 통일부 등의 정부 기관의 협력으로 비교적 안정된 직장에 취업하게 됨으로써 남한 사회 정착에서 유리한 첫걸음을 내딛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에서 노동자, 군인, 농민 등과 같은 낮은 계층의 사람들에게는 정착금과 취업 알선 등의 정착 지원에서 뒷전으로 밀려나게 된다. 따라서 북한에서의 계층 지위가 남한에서 재현되는 데에는, 개인의 인적 자본의 차이뿐만 아니라 탈북자의 계층과 유용성에 따라 불평등하게 대우하는 우리 정부의 방침이 일조하게 된다.

탈북자의 수가 증가하면서 북한, 중국, 남한을 연결하는 사회적 연결망이 형성되어서 이 연결망을 통해 정보와 재원이 교류하게 되고, 북한

〈표 1〉 국내 입국 연도별 탈북자 성별 분포(%)

연도▶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총계
성별▼ 이전													9.30
남성	92.8	100	100	75	100	92.3	85.4	76.8	65.9	74.6	60.8	60.1	80.6
여성	7.2	0	0	25	0	7.7	14.6	23.2	34.1	25.4	39.2	39.9	19.4
계	607	9	9	8	8	52	41	56	85	71	148	188	1,282

자료 : 통일부 인도지원국 정착지원과,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정책 추진현황”(2000. 9)

28) 김학성, “북한이탈주민(탈북이주자)의 남한사회적응에 관한 연구”.

〈표 2〉 국내 입국 연도별 탈북자 직업 배경 분포(%)

직업 / 연도	1989년 이전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벌목공·노동자·농장원	15.5	11.1	44.4	37.5	37.5	71.1	58.5
군인	40.2	33.3	0	0	12.5	5.8	14.6
해외상사원·외교관·지도원	0.5	33.3	11.1	12.5	12.5	1.9	7.3
당·정무원·교사	1.8	0	33.3	37.5	12.5	9.6	9.8
기타·학생·무직	18.6	22.2	11.1	12.5	25	11.5	7.3
자수간첩·전향	23.3	0	0	0	0	0	2.4
계	607	9	9	8	8	52	41

직업 / 연도	1996	1997	1998	1999	2000. 9. 30	총계
벌목공·노동자·농장원	50	32.9	50.7	48.0	48.4	32.8
군인	8.9	1.2	7.0	3.4	1.6	21.5
해외상사원·외교관·지도원	5.4	9.4	2.8	7.4	8.0	4.1
당·정무원·교사	8.9	16.5	7.0	9.5	3.7	5.6
기타·학생·무직	25	40	32.4	31.8	38.3	24.8
자수간첩·전향	1.8	0	0	0	0	11.2
계	56	85	71	148	188	1,282

자료: 〈표 1〉과 동일

에 남아 있거나 또는 중국에 체류하는 사람들을 남한으로 입국시키는 전문적인 브로커들이 등장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최근의 탈북은 국내외의 사회적 연결망을 따라 이동하는 연쇄 이동의 성격이 강하며, 실제로 최근 1~2년 사이에 국내로 입국한 탈북자들의 반수 이상은 이미 국내에 부모, 형제, 친척 등의 연고를 갖고 있다고 한다. 탈북 현상이 이처럼 제도화되고 보편화되면서 탈북자들의 배경 특성은 예전의 20~30대 중심의 군인 출신으로부터 다양한 연령층의, 다양한 출신 지역의, 다양

한 사회 경제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로 바뀌어가고 있다. 특히 가족 단위 입국자와 여성의 비율이 증가하였으며, 10대 이하의 청소년층과 50대 이상의 장년층 비율이 증가하였다. 계층 배경에서는 비록 당·정무원의 관료, 외교관, 지도원 등의 소위 엘리트 계층의 입국이 증가하였지만 별목공, 노동자, 농장원 등의 비율이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탈북자들의 전반적 배경 특성의 하향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변화들은 탈북자들의 남한 사회 적응의 유형이 더욱 다양화되고 적응 과정에서 이전에는 없었던 새로운 유형의 문제들이 발생할 것을 시사한다. 실제로 가족 단위 입국자들이 증가하면서 청소년들과 장년들의 사회적 적응 속도의 차이로 인한 세대 갈등과 남편과 아내의 지위와 역할 변화로 인한 부부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2) 제3국 체류 단계

두번째 단계인 ‘제3국 체류 단계’에서는 ‘탈북 경로’, ‘탈북자 유형’, ‘체류 경험’ 등이 중요한 요인들로 작용한다. 이 단계에서의 긴장과 신체적 상치나 손상 등은 국내 입국 후에도 외상후스트레스증후군(PTSD)을 나타내기도 하며 대인 관계에 장애를 가져오기도 한다. 그리고 동일한 탈북 경로와 체류 경험을 공유한 사람들이 국내에 입국해서도 유대 관계를 지속하면서 일차적 집단(primary group)을 형성한다. 그러나 탈북 경로와 체류 경험이 상이한 사람들간에는 사회적 거리감과 편견, 심지어 반감과 알력이 존재하기도 해서 탈북자 집단을 분열시키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1) 탈북 경로

북한 주민이 탈북하는 경로는 앞서 지적했듯이 북한 사회에서의 사회 계층적 지위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엘리트 계층의 경우에는 외국으로 유학, 공무 수행, 외화벌이 등의 목적으로 나갔다가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서 한국으로 망명하는 사례도 빈번하게 발생한다. 그러나 국외체류 탈북자 대부분의 경우는 중국과 북한의 국경을 불법 월경하여 주로 중국 동포들이 밀집한 동북 3성 지역에 거주한다. 앞서 지적하였듯이 중국과 러시아를 경유하여 한국으로 망명하는 것이 어려워지자 몽고, 태국, 미얀마 등 인근 국가들로 밀입국하는 사례가 최근 들어 증가하고 있다. 국외 탈북자 중 한국으로 입국하는 경로는 중국이나 러시아를 경유하거나 또는 휴전선이나 해상을 통해 직접 남한으로 입국하는 경우로 나눌 수 있다. 최근에 와서는 탈북 경로가 다원화되었는데 1960년대에는 탈북자의 60%가 휴전선이나 해상을 통해 남한에 도달했으나 1980년대 이후에는 중국, 러시아, 미얀마, 몽고 등 제3국을 경유한 경우가 압도적이라고 한다.²⁹⁾

(2) 탈북자 유형

탈북자 유형은 앞서 설명하였듯이 체류 기간과 북한으로의 귀환 의지에 따라서 단기 체류자, 장기 체류자, 탈북자로 구분할 수 있다. ‘좋은 벗들’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재중 탈북자의 경우 50% 가량이 3개월 미만의 단기 체류자이고, 29% 가량이 6개월 이상의 장기 체류자로 나타났다.³⁰⁾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선교팀의 추산에 따르면 국경을 넘나드

29) 박종철·김영윤·이우영, 『북한이탈 주민의 사회적응에 관한 연구: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는 탈북자들 중 약 90% 이상은 식량 문제가 해결되거나 소기의 목적이 달성되면 바로 북한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한다. 탈북한 식량 난민 중 중국과 러시아 내륙으로 유입되는 경우는 10%를 넘지 않고, 이렇게 방황하는 국외 탈북자의 규모는 5만 명~10만 명으로 추산된다.³¹⁾ 비록 아직까지는 대부분의 탈북자들이 단기 체류자이지만 이들 중 많은 사람들이 여러 사정으로 인해 장기 체류자로 변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북한으로 귀환하는 것이 어렵게 되면서 귀순하려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추세이다.

‘좋은 벗들’의 현지 조사에 따르면 중국 내 탈북자의 성별 분포는 여성이 75.5%, 남성이 24.5%로 여성이 압도적으로 많다. 중국에서 탈북자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는 한 구호 단체 요원의 추산에 따르면 1999년 12월 당시 탈북자의 남녀 성비는 2:8 정도로 여성 탈북자가 많다고 한다.³²⁾ 여성 비율이 높은 이유는 첫째, 여성의 경우 처녀가 부족한 농촌 지역이나 도시의 유흥가에서 수요가 많지만 남성의 경우에는 수요가 적기 때문이다. 둘째 이유는 북한 경비병이 탈북자를 체포했을 때 여성의 경우에는 구류 기간이 길어야 1주일 이내이고 아동의 경우에는 거의 구류되지 않는다. 그러나 남성의 경우에는 ‘사상 오염’이나 정치적 배경에 관한 경계 때문에 장기간(2~3개월) 구류에 처해진다. 연령 분포를 보면 20~30대가 61.3%로 주류를 이루고 있다. 북한 접경 지역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지역일수록 여성 비율이 높고, 결혼 형태로 거주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높다.

러시아에 체류중인 탈북자들은 재중 탈북자들과 비교해서 규모가

30) 좋은 벗들, 『두만강을 건너온 사람들』.

31) 박요셉, “해외체류 탈북자 현황과 대책”, 10쪽.

32) 광해룡, “중국에 있는 북한이탈주민 인권실태에 관한 연구: 신(新)이산가족 현상의 발생을 중심으로”, 261쪽.

400~2,000명 정도로 적고, UNHCR을 통한 합법적 국내 유입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국내 언론과 국민들의 관심을 끌지 못했다. 그러나 재러시아 탈북자도 러시아 경찰과 북한 공원 요원에 의한 체포와 강제 송환의 위협 속에 살고 있고 노동 착취 등의 인권 침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1999년 11월 2주 정도의 기간에 모스크바, 중앙아시아, 연해주 일대를 현지 조사한 윤여상의 보고서³³⁾는 재러시아 탈북자의 특성과 실태에 대해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우선 탈북자의 배경을 살펴보면 벌목공, 건설 노동자, 농업 노동자로 러시아에 파견되었다가 근무지 이탈 후 귀환하지 않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북한은 근무지를 이탈한 후 3~6개월 이내에 귀환하지 않으면 탈북자로 간주하고 체포 대상으로 삼는다. 이 외에도 북한에서 직접 러시아로 월경하는 사람들이 있기는 하지만 큰 수는 아니다. 또한 중국 내 탈북자가 러시아로 유입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한 경우가 최근 들어서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직업 배경의 영향으로 대부분의 탈북자들이 20~30대 또는 40대의 독신 남성들이다. 이들은 비록 벌목장, 탄광, 건설 현장, 농장 등의 단순 노동자로 파견되어 왔으나, 북한에서 당성을 인정받았고 출신 성분이 우수하며 학력 수준도 높은 사람들이 많다. 그 이유는 러시아에 파견되면 북한에 비해 높은 임금을 받고 귀국할 때 외제 전자 제품 등을 사가지고 올 수 있으므로 선망의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벌목공 출신들 중에는 북한에서 당간부, 교사, 의사 등의 관리직, 전문직 출신들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

33) 윤여상, “탈북자 적응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

(3) 체류 경험

탈북 후 국외에서 장기 체류하는 과정과 경험은 탈북 경로와 탈북자 유형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대부분의 탈북자들에게 있어서 탈북 과정은 목숨을 내건 위험천만한 모험이며, 국외 탈북자들은 자신들의 불법 체류자 신분으로 인해 북한 공안 요원이나 현지 경찰에게 체포·송환될지 모른다는 두려움을 항상 갖고 있고 굶주림과 추위에 떨면서 기약 없는 유랑 생활을 지속하고 있다. 이들이 겪는 '인권 유린 사례는 부지기수며, 특히 재중 탈북 여성들의 매춘 및 인신 매매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또한 '꽃제비'³⁴⁾라고 불리는 3~15세의 어린이들이 때를 지어 몰려다니면서 구걸을 하고 절도 등 범죄 행위도 자행하고 있어 중국 조선족 사회에서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한다. 탈북 어린이들은 대부분 결손 가정 출신으로 북한에서도 보호자가 없는 경우가 많다. 이들의 영양 상태는 최악에 가까우며, 나이에 비해서 성장 발육의 정도가 크게 못 미친다. 일례로 8세 정도의 남자아이로 보이는 탈북자를 조사한 결과 15세 소녀(고등중학교 3년)로 밝혀지기도 하였다.³⁵⁾ 이들은 극한 상황을 지속적으로 경험한 결과 영양 상태가 최악에 가깝고 죽음도 가벼이 여기는 등 정신적 피해가 심하다고 한다. 그래서 이들이 성인이 되었을 경우 정상적인 사회 성원이 될 수 있을지 우려된

34) 꽃제비란 북한 사회에서 거지를 일컫는 말인데 사회주의 국가에 거지가 있다면 말이 되지 않으니까 제비라고 부르는 것이라고 한다. 이들 거지는 연령에 따라 노제비(늙은 제비), 청제비(젊은 제비), 꽃제비(어린 제비)로 나누는데 가장 고통받는 것이 노제비라는 것이다. 왜냐하면 청제비와 꽃제비는 나름대로 조직이 있어 먹을 것을 찾아 먹는데 노제비는 늙은 몸으로 기력이 쇠잔하여 가장 비참한 삶의 모습을 보인다고 한다. 광해룡, "중국에 있는 북한이탈주민 인권실태에 관한 연구: 신(新)이산가족 현상의 발생을 중심으로". 노제비는 노령과 기동력 부족으로 인해 탈북에는 가담하고 있지 않다.

35) 윤여상, "중국동북지역 탈북자 실태와 지원방안", 10쪽.

다고 한다.³⁶⁾

탈북 여성들에게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인신 매매이다. 여성들은 체류 목적으로 한족 할아버지나 조선족 농촌 총각과 동거하는 경우가 많으나 인신 매매가 일어나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탈북 여성들은 연변 도심 지역의 유흥업소에 진출하기도 하며, 전문적으로 북한에서 여성들을 데려와 매춘 알선하는 조직도 활동하고 있다. 매춘업에 종사하는 탈북 여성들의 경우 중국인 매춘부에 비교해서 절반 수준의 화대를 받고 일을 하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탈북 여성들은 불법 체류자라는 신분 때문에 비인간적인 처우를 감수해야 한다.

신변 위협의 측면에서 보면 중국 공안의 탈북자 색출은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체포된 탈북자는 곧바로 북한으로 송환되고 있다. 송환된 탈북자는 우선 국가보위부에서 취조를 받은 후 정치적인 동기가 있는 자로 의심받거나 중국에서 1년 이상 체류할 경우, 또는 재일 북한인 귀국자 등의 경우에는 즉시 ‘중범죄자’가 되어 정치범 강제 수용소로 이송된다. 반면 단순한 월경자는 사회안전부가 관리하는 집결소로 우송되어 대략 2주일에서 3개월간의 수감 생활을 한다. 수용 기간 중에는 사회안전부의 감시하에서 사상 교육이 행해지고 안전부 소유의 전답을 경작하는 등 각종 노동을 해야 한다. 강제 송환된 사람 중 아동의 경우에는 아동 전용의 집결소로 이송된다. 고아의 경우에는 ‘9·27’이라고 불리는 수용 시설에 이송되고 가족이 있는 아동의 경우에는 가족에게 인계된다.

재러 탈북자의 경우 이들은 탈출 후 최소한의 생계 유지와 은신처 확보를 위해 고려인 생활 지역인 극동 지역과 중앙아시아 지역, 그리고

36) 위의 글. 국외 탈북자들과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 및 교화소에 수감된 주민들의 인권 유린 실태에 관해서는 북한인권시민연합의 홈페이지(<http://www.nkhumanrights.or.kr>)에서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다.

모스크바 시내에서 체류하고 있다. 대부분의 탈북자는 현지 고려인 또는 러시아인의 별장이나 자택, 교외의 농장, 공장 등에서 노동력을 제공하고 은신처를 제공받고 있다. 그러나 경찰의 단속과 북한 공원 요원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주거지를 자주 옮겨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대부분의 탈북자들은 탈출 당시 최소한의 생계 유지 수단도 갖지 못한 상태이다. 현지어를 일정 수준 구사하게 되면 일자리를 얻고 은신처와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이곳 저곳을 전전하며, 일용직 노동자로 일을 하거나, 현지 주민이나 한국인 선교사, 주재원, 유학생 등의 도움을 받아 생활하게 된다.

탈북자들은 북한으로의 귀환을 포기하고 나면 한국행이나 러시아 현지 체류, 그리고 제3국으로의 이주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그러나 앞서 지적하였듯이 러시아 정부는 탈북자를 난민으로 인정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현지 체류가 불가능하고, 결국은 한국행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전개된다. 그러나 UNHCR을 통해 합법적인 한국행을 추진하더라도 최소한 1~2년 정도의 체류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그 동안에 체포당하지 않기 위해 숨바꼭질 생활을 해야 한다.³⁷⁾

따라서 대다수의 국외 탈북자의 경우에 체류 경험은 긴장과 불안의 연속이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북한보다 일찍 개방화되고 자본주의 체제로의 전환이 진행중인 중국과 러시아에서 체류하는 동안 새로운 생활 양식과 경제 체제를 체험하기도 한다. 이때 자본주의 체제에서 통용될 수 있는 새로운 기술, 가치 체계, 생활 양식 등을 학습한다면 남한 사회에서의 적응에 도움이 될 것이고, 그렇지 않고 정신적 외상을 연속적으로 경험하였다고 하면 남한 사회 적응에 걸림돌이 될 것이다.

남한 사회에서 물질적·정신적 측면 모두 성공적으로 적응하고 있다

37) 해외 탈북자의 탈북과 유랑 생활에 관해서는 강봉학, 『원수의 나라로』(서울: 국민일보사, 1995); 김호, 『남녘으로 가는길』(서울: 생명과 인권, 1998) 참조.

고 평가받는 탈북자들의 대부분은 동유럽 유학생, 해외 주재 외교관, 외화벌이 요원 출신들이다. 이들은 남한 사회에서도 적용될 수 있는 인적 자원을 갖고 있고 일찍이 자본주의 체제에 노출되어서 자본주의적 사고 방식과 행동 양식을 갖고 있으므로 적응의 속도가 빠른 사람들이다. 또한 중국, 러시아 등지에서 사업을 해본 사람들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남한에서도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이 상당수 있다.³⁸⁾ 그러나 제3국에서조차 유랑과 도피로 일관했거나 또는 단순 노동직이나 서비스직에 종사했던 사람들은 체류 경험이 남한 사회 적응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3) 국내 입국·정착 단계

탈북자가 남한으로 입국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경로들을 거쳐서 남한 사회에 편입하게 된다. 도착 즉시 ‘대성공사’라고 하는 국방부 정보사령부에서 운용하는 조사·수용 시설에 수용된다. 과거에는 그곳에서 1개월간의 1단계 신분 조사 과정을 마치고 5개월 가량의 2단계 정보조사 과정을 마쳤다. 그러나 1999년 7월 ‘하나원’이 완공된 이후 대성공사에서 1개월간의 조사 과정을 마치고서는 곧바로 하나원으로 이전되어 3개월 가량 교육생의 신분으로 사회 적응 교육을 받게 되었다. 하나원을 나와서 사회에 편입하게 되면 지방 자치 단체별로 지정된 거주지 보호 담당관(145개 광역·기초 자치 단체)을 통해 거주지 편입 및 각종 사후 지원을 받게 된다. 그리고 사회 편입 후 2년간 담당 형사에 의해 신변 보호 및 생활 안내·지도를 받게 된다.

38) 윤인진, “북한이탈주민 자립·정착을 위한 자조모델 연구-효과적 자영업기반 형성을 중심으로”, 143쪽.

탈북자의 국내 정착 단계에서는 ‘남한 사회의 수용 여건’과 ‘탈북자 특성’이 중요한 요인들로 작용한다. 수용 여건에는 정부의 탈북자에 대한 태도와 정착 지원의 수준 및 내용, 일반 남한 주민의 탈북자에 대한 태도와 교류, 민간 단체의 지원활동의 폭과 내용 등이 있다. 탈북자 특성에는 개인 수준의 인구학적·가족적·사회 계층적·심리적 특성들과 함께 집단 수준에서 탈북자간의 교류와 연대 수준, 자신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증대시키기 위한 결사체, 조직 등의 결성 여부와 활동 내용 등이 있다.

(1) 수용 여건

탈북자의 사회 적응 수준은 입국 연도에 따라서 상당히 다르게 나타나는데, 그 주된 이유는 시기별로 정부가 탈북자를 인식하는 태도와 정착 지원의 폭이 달랐기 때문이다. 1960~80년대에는 탈북자를 ‘귀순 용사’ 또는 ‘국가 유공자’로 포상적·시혜적 차원에서 대우하였다. 남북 대치 상황에서 반공 이데올로기를 통치 수단으로 삼은 역대 군사 정권 하에서 탈북자들은 남한 체제의 우월성을 입증하는 정치적 가치를 지닌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정치적 논리가 경제적 논리를 압도하면서 탈북자들에게 전폭적인 지원이 제공되었고 따라서 이 시기에 입국한 사람들은 경제적·사회적으로 큰 어려움 없이 적응할 수 있었다.

그러나 1992년에 문민 정부가 출범하면서 반공 이데올로기의 효용성이 감퇴하였고 이로 인해 탈북자들의 정치적 가치가 평가절하되었다. 이러한 배경하에 1993년에 ‘귀순북한동포보호법’이 제정되었고 담당 부서가 국가보훈처에서 보건복지부로 이전되었다. 새 법 명칭이 의미하듯 탈북자들이 더 이상 귀순 용사나 국가 유공자가 아닌 생활 보호 대상

〈표 3〉 정부의 시기별 탈북자 지원 정책의 특성

시기	1962. 4. 16~ 1978. 12. 31	1979. 1. 1~ 1993. 12. 10	1993. 12. 11~ 1996. 7. 13	1997. 7. 14~ 1998. 12. 31
관련법	국가 유공자 및 월남 귀순자 특별 원호법	월남 귀순 봉사 특별 보상법	귀순 북한 동포 보호법	북한 이탈 주민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
특성	보호 차원	체제 선전 차원	사회 복지 차원	통일 대비 차원
소관 부처	원호처(국방부)	원호처 → 국가 보훈처(국방부)	보건사회부	통일원 → 통일부
정책금	정착 수당 지급 1급: 100만 원 2급: 70만 원 3급: 50만 원	지급 기준: 신분 및 정보 가치 지급액: 황금 1,900g~ 14,500g(1,900만 원~ 1억 4,500만 원)	지급 기준: 가족 수(기본금) 정착 여건(가산금) 지급액: 월 최저 임금의 20~ 100배(690만~3,450만 원) 대부분 1인 가족(690만)	지급 기준: 가족 수(기본금) 연령 건강 상태 근로 능력(가산금) 지급액: 좌동
보로금	없음	지급 기준: 후대 장비 가치 지급액: 금 10g~ 14,500g	지급 기준: 정보 가치+후대 장비 가치 지급액: 금 10g~20,000g	지급 기준: 좌동 지급액: 최고 2억 5천만 원
주거 지원	국가 용자 건립 주택 입주 우선권	무상 15평 이상	15평 이상 무상 임대 보증금	25.7평 이하 무상 임대 보증 금
교육 보호	본인: 대학까지 공립 금, 학자금 자녀: 고등학교까지 공납금, 학자금	좌동	본인에 한해 국립: 면제, 사 립: 50%	본인에 한해 국립: 전액 사립: 50% 고교 20세(25세) 미만, 대학 30세(35세) 미만
취업 알선	국가 지자체 일정 규 모 이상의 기업체는 전 고용인의 3% 이내 고용	본인 자녀를 16인 이상 고용업체에 3~8% 범위 내 의무 고용	본인에 한해 채용 알선 기능직 공무원 요청시 우선 채 용	취업 희망시 협조 요청
특별 임용	공무원, 국공기업에 특별 임용	특별 임용(해고 제한)	특별 임용	특별 임용
적응 교육	없음	없음	없음	있음
직업 훈련	자활 보호 차원	대상자 지정 훈련	희망자 노동부 협조 요청	국가 비용으로 훈련
생활 보호	상이지에게 수당 지급	생계 곤란자 구호 수당 (상이지 연금 지급)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활 보호	좌동
대부 제도	없음	유공자법에 의한 대부	없음(종전자 경과 조치)	없음
의료 보호	의료 보호	의료보호법에 의한 보호	좌동	좌동
자격 인정	없음	없음	없음	있음

자료: 김진운·윤여상, "통일 교육·홍보(V)", 『97신진 연구자 북한 및 통일 관련 논문집』(서울: 통일원, 1997), 312~317쪽; 『통일부 30년사』.

자로 신분이 하락하였고 이들에 대한 정착 지원도 대폭 축소되었다. 이로 인해 1994년부터 1998년 사이에 입국한 탈북자들은 취업과 소득 면에서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그 불만과 상대적 박탈감이 집단적으로 표출되어 1998년 12월 13일에 ‘자유를 찾아온 북한인협회’(약칭 자유북한인협회)라는 조직을 결성하게 되었다.³⁹⁾ 이 협회 간부들은 1999년 1월 15일에 카톨릭회관에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등의 4개 인권 단체들과 함께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자신들이 입국 후 ‘대성공사’라고 하는 합동 수사 기관에서 구타, 고문, 인격 모독 등의 인권 침해 사례를 겪었다고 증언하기까지 하였다. (<표 3>은 시기별로 정부의 탈북자 지원 정책이 어떻게 변화했는가를 보여주고 있다.)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1999년 1월부터는 정착 지원금을 인상하고, 직업 훈련 수당과 생계 곤란자 특별 지원금을 지급하고, 2000년부터는 취업 보호를 위해 탈북자를 고용하는 고용주에게 탈북자 임금의 반을 보조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그리고 1997년에는 하나원을 건립하여 탈북자의 사회 적응을 위한 단기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이렇듯 <표 4>에서 보듯이 1999년 이후의 정부의 탈북자 지원 정책은 탈북자의 사회 적응 능력과 자활 능력을 높이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

남한 주민의 탈북자에 대한 태도와 교류는 탈북자의 사회 문화적 적응과 심리적 적응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우리 국민이 탈북자들에 대해서 갖는 태도는 북한에 대한 부정적 태도가 이들에게 전이되는 인상을 준다. 그리고 북한 주민에 대한 우리의 편견과 고정 관념이 이들에게 투영되어 이들을 하나의 동질적인 집단으로 바라보고 개성과 개별성을 갖춘 개인으로는 인식하려고 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또한 우리

39) 윤인진, “탈북자의 남한사회 적응실태와 정착지원의 새로운 접근”.

국민은 탈북자에 대해서 태도와 행동 간의 이중성을 보이고 있어, 관념적인 차원에서는 탈북자의 사회 정착을 위한 정부 지원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자신에게 어떠한 형태의 구체적인 피해나 비용이 부담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성향을 보인다. 이런 편견과 차별로 인해 탈북자들이 남한 사회에서 적응을 시도하다가 좌절하면서 느끼는 심리 상태는 한마디로 소외 또는 주변화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의 상당수는 자신들이 남한정부나 주민들로부터 ‘이방인’, ‘2등 국민’, ‘귀찮은 존재’로 인식되고 있다고 느끼고 있으며 이러한 감정은 정착 시기가 길어질수록 증가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표 4〉 탈북자 자립·정착 기반 확립을 위한 정부의 지원 정책(1999. 12)

지원 제도	주요 내용
취업 보호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탈북자 고용 기업에 대해 고용 지원금(임금의 1/2, 월 70만 원 이내)을 2년간 지급 지방노동사무소 취업 보호 담당자를 통한 탈북자의 적성·희망을 고려한 취업 알선, 직업 훈련 직종 다양화
영농 정착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영농희망자에 대해 교육 훈련·농업 현장 실습·농업인 후계자 선정 등의 혜택을 제공 지방 거주 적극 유도 : 주택 지원금의 지방 거주 장려금 대폭 인상 (10~15% → 40~70%)
생업 지원제	자활·자립능력 부족자, 생계곤란자 등에 공공편의시설 우선 위탁
노령 연금 혜택	신규 입국자 중 50세 이상 60세 미만자 대상으로 지급
북한이탈주민후원회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후원 사업 구체화 및 정부 지원 근거 마련 민간단체협의회를 통한 정부-민간 단체 간의 협력 관계 구축
거주지 보호 기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

자료 : 통일부 인도지원국 정착지원과,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정책 추진현황"(2000. 6).

탈북자의 사회 적응을 위해서 정부와 일반 주민들이 담당하지 못하는 영역은 민간 단체에서 담당해야 한다. 정부는 전체적인 방향을 세우고 재정 지원을 할 수는 있어도 각 탈북자의 개별적인 상황을 파악하고 적절히 대처하는 데 한계가 있다. 탈북 후 장기 체류의 정신적 외상으로 고통받는 탈북자들에게는 종교 단체와 자원 봉사자들이 심리적 적응과 안정을 가져다주는데 훨씬 효율적이다. 외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종교 단체, 인권 단체들이 난민들이나 이민자들의 사회 적응에 지대한 역할을 수행했고, 정부와 민간 단체 간의 파트너십이 큰 성과를 거두었다.⁴⁰⁾

우리의 경우에도 종교 단체와 시민 운동 단체들이 국내외 탈북자 지원 사업에 가장 적극적인 노력을 펼쳐왔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지원 사업은 주로 자매 결연, 생필품 지원, 생활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이었고, 재정 부족으로 인해 대부분 일회성 위안 행사 위주였으며, 단기적·응급 구호적 성격이 강했다. 또한 지원 사업을 하는 개인과 단체가 연계하지 못하고 고립되어 활동함으로써 경우에 따라서는 중복적이고 경쟁적으로 지원 사업을 수행했다. 이러한 시행 착오 끝에 1999년 11월 3일에 ‘북한 이탈 주민 지원 민간단체협의회’가 결성되어 20개의 단체와 개인들이 회원으로 참여하여 사업을 진행 중에 있다.

윤인진은 독일, 미국, 이스라엘의 난민 수용·정착 정책을 비교하면서 정부와 국민의 난민에 대한 의식, 경제력, 사회 보장 체계, 시민 단체(NGOs)의 구출 활동의 전통, 난민민족공동체의 존재 등이 중요한 요인들로 작용하였다고 지적하였다.⁴¹⁾ 독일의 경우는 튼튼한 경제력과 독일 민족주의가 결합되어 동포애적인 사랑으로 동독 이주민들을 포용하

40) 이기영, “탈북자 지원 민간단체와 정부와의 파트너십(partnership)연구”, 『’98 신진연구자 북한 및 통일관련 논문집』(서울: 통일부, 1998); 윤인진, “탈북자의 남한사회 적응실태와 정착지원의 새로운 접근”.

41) 윤인진, “탈북자의 남한사회 적응실태와 정착지원의 새로운 접근”.

였다. 미국의 경우는 정부와 종교 단체들과의 협력체계가 난민들의 초기 정착 단계에 큰 기여를 하였고, 그 이후에는 민족 공동체의 자생적이고 집합적인 노력이 경제적·사회문화적 적응을 가속화시켰다. 미국이 인도차이나 난민이나 쿠바 난민들을 수용하기로 결정한 것은 자신들의 과거 행적에 대한 마땅한 대가라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일단 수용한 난민들의 정착을 돕기 위해 정부와 시민 단체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된 정신적 배경에는 미국 종교·시민 단체의 구휼·봉사 활동의 오랜 전통, 1960년대 중반 이후의 민권 운동에 의해 증대된 사회 약자층에 대한 사회적 배려 등이 자리잡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스라엘의 경우는 건국 자체가 이주민들에 의해서 이루어졌고 이주민의 지속적 유입이 국력신장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정부와 국민 간에 합의가 형성되고 이주민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함께 참여하게 되었다.⁴²⁾

외국의 사례들과 비교하여 본 우리나라의 탈북자 지원 정책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첫째, 탈북자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정부와 국민 간의 공감대와 합의가 아직 형성되어 있지 않고 탈북자들을 지원해야 하는 윤리적·사회 철학적 근거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 우리는 겉으로는 북한 주민도 같은 동포라고 말해 왔지만 지금까지 탈북자들을 동포애로서 포용해 왔다기보다는 정치적 목적을 위해 활용해 왔고, 그러한 정치적 가치가 감소하게 된 현 상황에서 이들을 지켜줄 새로운 가치 체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둘째, 우리의 경제력이 독일이나 미국처럼 난민들의 수용과 정착을 위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할 만큼 튼튼하지 않다는 점이고, 특히 1997년 연말 이후의 경제 위기는 더욱더 국민들로 하여금 탈북자들을 귀찮은 존재, 부담

42) 위의 글 참조.

스러운 짐으로 인식하게끔 하였다. 셋째, 우리의 사회 보장 체계는 남한 주민조차도 종합적으로 지원하지 못하는 상황이며, 우리의 종교 단체, 시민 단체는 외국의 경우에서처럼 연합체를 구성하여 빈민 구휼 활동 등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전통과 능력이 부족하다. 넷째, 우리 국민의 전반적인 의식 속에 사회 약자층(장애인, 빈민, 여성, 어린이, 노인, 노숙자 등), 인권 등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아직 크지 않은 것도 탈북자와 같이 새롭게 우리 앞에 다가선 약자층에 대한 지원에 인색하게 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2) 탈북자 특성

앞서 여러 차례 지적하였듯이 탈북자의 인구학적·계층 배경적 특성은 사회 적응의 속도, 수준, 유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기존 연구에 따르면 탈북자의 사회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⁴³⁾

첫째, 인구학적 특성이다. 탈북자의 연령, 성별, 결혼 여부, 가족 형태 및 크기 등과 같은 인구학적·가족적 특성은 탈북자의 사회 경제적 적응에 큰 영향을 미친다. 연령이 젊을수록 사회 적응 속도가 빠르고, 40대 또는 50대에 입국한 탈북자들은 재사회화가 어렵고 자격증이 있어도 연령 차별 때문에 직장을 갖기 어렵다. 결혼은 탈북자의 정신적 안정을 높이고 배우자가 남한 주민일 경우 그(녀)의 친척·친지들의 연결망을 활용하여 남한 사회의 정보와 기회를 얻는 데 큰 기여를 한다. 적응의 성공 여부와 관련된 또 한 가지 중요한 가족 변수는 가족의 크기

43) 윤인진, “탈북자의 남한사회 적응실태와 정착지원의 새로운 접근”; 전우택, “탈북자들의 주요 사회배경에 따른 적응과 자아 정체성에 관한 연구”, 『사람의 통일을 위하여』.

이다. 이 경우에는 일가족이 탈북한 사람들이 단신으로 탈북한 사람들보다 경제적·심리적으로 빨리 안정을 찾는 경향이 있다. 또한 남한에 가족이 이미 있는 사람들은 사회적·심리적인 안정을 찾고 적응하는데 유리한 위치에 있다. 최근 들어 가족 동반 국내입국자가 증가하는 것은 앞서 지적한 연쇄 이동의 결과로서 사회 심리적 적응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

둘째, 탈북자의 사회 경제적 배경은 사회 적응의 속도와 정도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 앞서 지적하였듯이 입국 전의 사회 계층은 입국 후의 사회 계층을 재현하는 경향이 있다. 취업과 소득 면에서 가장 문제가 심각한 집단은 북한에서 노동자, 농장원, 벌목공 출신들이었고, 고위 간부, 전문 분야, 사무직 출신들은 취업과 소득 면에서 안정적이었다. 또한 고위 간부·전문직 출신의 경우 결혼률은 30% 이상인데, 노동자·농장원 출신의 경우에는 10%도 되지 않았다.⁴⁴⁾ 탈북자들 가운데 가장 성공적으로 적응하였다고 볼 수 있는 집단은 동유럽 유학생출신들인데, 이들의 경우는 유학생이었다는 점에서 지적 능력과 인적 자본이 뛰어나며 상황 변화에 대한 적응이 빠른 사람들이다.

이렇듯 현재 탈북자 집단에서는 북한에서의 신분과 지위, 남한으로의 입국 경로, 입국 시기 등의 차이로 인해서 남한에서 탈북자들 간에 사회 계층과 불평등이 재현되는 것이고 이로 인해 이들 계층간의 사회적 거리감과 편견이 심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사회 계층이 재현되는 첫번째 이유는 1980년대 이전 탈북자들의 대부분이 공작원, 군인 등의 특수 계층이었던 반면 1990년대 이후의 탈북자들은 학생, 외교관, 외화벌이 요원, 벌목 노동자, 군인 등의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로 구성되었다는 것이다. 두번째 이유는 정부가 탈북자의 신분과 그가 제공한 정보 또는

44) 김학성, “북한이탈주민(탈북이주자)의 남한사회적응에 관한 연구”, 73~79쪽.

장비의 가치에 따라 차등적으로 보로금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재화나 정보에 대한 접근은 북한에서 높은 지위를 갖고 있던 사람들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이들이 보로금 액수 면에서 앞서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따라서 북한에서 노동자 계층, 적대 계층에 속했던 사람들은 북한에서의 핍박을 피해서 남한에 왔는데 자신들은 냉대를 받고 오히려 자신들을 탄압했던 지도층 인사들은 남한에서 정착금도 더 많이 받고 대우를 잘 받는 것을 보면서 불공평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다 보니 남한에 있는 탈북자들은 하나로 단결하지 못하고 비슷한 신분에 있는 사람들끼리만 어울리는 경향이 강하다.

셋째, 후원자의 여부이다. 앞서 지적하였듯이 탈북자를 관리·지원하는 체계가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탈북자의 적응 여부는 개인의 노력과 그가 우연히 알게 된 후원자의 지원 정도에 달려 있다. 특히 어떤 사람이 담당 형사가 되느냐 하는 것이 한 탈북자의 운명을 가름하기도 한다. 담당 형사가 탈북자의 취업과 일상 생활의 많은 부분을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친절하고 말이 넓은 형사를 배정받은 탈북자는 순조롭게 사회 정착을 시작하지만 그렇지 못한 탈북자는 지급받은 정착금마저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빈털터리가 되고 만다. 이렇게 한 형사가 자신의 공무 이외에도 탈북자의 생활을 책임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현재의 탈북자 지원 정책이 얼마나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전국에 산재한 사회 복지 기관과 각 대학에서 운영하는 사회 교육 센터가 이들의 경제적·심리적·사회 문화적 적응을 지원하는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탈북자 전담 사회복지사가 탈북자의 신체적·정신적 상태와 인적 자원의 정도를 측정해서 적합한 직업과 주거지를 찾아주고, 교육을 받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적합한 교육 기관과 전공을 추천하는 제도를 하루빨리 정착시켜야 한다. 그리고 초기 적응 기간에 탈북자의 인구학적·사회 경제적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후원자를 선정하여 그를 통해 남한 사회와 남한 주민과의 우호적 관계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탈북자와 남한 주민을 의형제, 의자매, 양부모 등의 관계로 맺어주거나 후원금 제도를 개발하여 남한 주민 중 한 사람이 책임 있게 탈북자를 보호·지원하는 체계를 활성화해야 한다. 이러한 면에서 종교 단체, 시민 단체, 인권 단체, 교육 단체 등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

4) 사회 적응의 유형

원래 적응이란 생물 생태학에서 사용하던 개념으로 “생물 유기체가 생존을 위해 주어진 환경 조건에 적합하도록 자신을 변용시켜 나가는 일련의 과정”을 의미한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학자들은 적응의 개념을 확장하여 주체적 의지를 가지고 능동적으로 환경에 대처하는 인간의 다양한 활동 양상이나 인간과 환경과의 상호 작용도 포함시키고 있다.⁴⁵⁾ 따라서 사회적인 의미로서의 적응은 한 개인이 사회의 다양한 상황이나 조건과 잘 어울리는 상태 및 과정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개인의 내적·심리적 욕구와 외적·사회적 환경과의 사이에 조화를 이루어 일상 생활에서 좌절감이나 불안감 없이 만족을 느끼는 상태를 가리킨다. 탈북자와 관련해서 적응은 크게 정치 사상적 적응, 경제적 적응, 심리적 적응으로 구분된다.⁴⁶⁾ 여기서 정치 사상적 적응은 북한의 공산주의 사상, 주체사상의 획일적 가치관에서 벗어나 남한의 자유 민주주의적 가치관을 수용하는 정도와 과정을 가리킨다. 경제적 적응은 자본주

45) 김귀옥, 『월남인의 생활 경험과 정체성 : 밑으로부터의 월남인 연구』(서울 :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0), 327쪽.

46) 전우택, “탈북자들의 주요 사회배경에 따른 적응과 자아 정체성에 관한 연구”.

의 체제의 이해 및 독립적이고 적정 수준의 경제 생활의 영위를 가리킨다. 끝으로 심리적 적응은 새로운 사회에의 만족감, 적응 능력의 자신감, 사회의 정식 구성원으로서의 소속감을 가리킨다.

그런데 적응이라는 개념은 다양한 측면이 있다는 점 이외에도 누구의 시각에서 측정되느냐에 따라서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 즉 취업 상태, 소득, 고용 안정성, 질환 유무 등과 같은 객관적인 지표로서 적응 수준이 타인에 의해서 측정될 수도 있지만, 본인 자신은 그러한 객관적인 지표에 별로 구애받지 않고 주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타인과 본인이 모두 적응 또는 부적응으로 판정한 경우에는 문제가 없지만, 타인은 적응이라고 판정하고 본인은 부적응이라고 판정한 경우에는 피병과 같은 것이 된다. 반대로 타인은 부적응이라고 판정하고 본인은 적응이라고 판정하면 자신이 건강하다고 우기는 것과 같다. 결국 적응을 완전하게 측정하기 위해서는 객관적 지표와 주관적 지표를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데, 그것이 현실적으로 용이한 것도 아니고 결과가 항상 일관되게 나타나는 것도 아니다.

이러한 적응 개념의 복잡한 면들을 감안하면서도 본 연구에서는 비록 추상적이고 이념적인 수준이지만 단순한 모형을 제시해 보려고 한다. 여기서 적응은 크게 물질적(또는 경제적) 측면과 정신적(또는 심리적) 측면으로 구분되고, 이 두 가지 측면의 관계를 살펴보려고 한다. 물질적 측면에서의 적응이란 남한 사회에서 독립적 생활을 하는 데 필요한 소득, 기술, 직업 등을 획득하는 것을 의미하고, 정신적 측면에서의 적응이란 남한 사회의 정식 구성원(full member)으로서 자신이 사회에 귀속되어 있으며, 사회로부터 동등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인식하는 것을 의미한다.⁴⁷⁾ 완전한 적응이란 물질적 적응과 정신적 적응이 동시에

47) 윤인진은 적응을 '취업', '직장 생활', '언어', '가치관/사고 방식', '법과 제도', '노래, 춤, 영화 등 대중 문화', '남한 사람과의 관계' 등과 같은 세부 영역으로 구분하여,

이루어진 상태라고 말할 수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 이 두 가지 측면이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아래 표와 같은 적응의 네 가지 유형을 가정할 수 있다.

〈표 5〉 탈북자의 남한 사회 적응의 유형

		정신적 적응	
		성공	실패
물질적 적응	성공	I. 완전 적응 (통합, Integration)	II. 부분 적응 (고립, Isolation)
	실패	III. 부분 적응 (문화적 동화, Acculturation)	IV. 부적응 (주변화, Marginality)

위 표의 I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완전하게 적응한 상태로 통합이라고 부를 수 있다. II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물질적 측면에서는 잘 적응하였지만 정신적 측면에서는 남한 사회에 소속감을 갖지 못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고립이라고 부를 수 있다. III항의 경우는 역시 부분 적응 형태로서 물질적 측면에서는 잘 적응하고 있지 못한데도 불구하고 정신적 측면에서는 남한 사회

1970년과 1999년 사이에 입국한 총 77명의 탈북자들(연령이 20~60세로서, 현재 취업 중이거나 이전에 취업 경험이 있는 사람들만 포함)을 대상으로 주관적으로 측정된 적응도를 분석하기도 하였다. 연구 결과는 취업, 직장 생활, 언어, 가치관/사고 방식 등의 영역에서는 보통이라고 대답한 사람들이 다수였지만, 법과 제도, 춤, 영화 등 대중문화 영역에서는 적응하는 사람보다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더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윤인진, 『북한이탈주민의 직장부적응 문제 조사 및 적응력 향상 방안 연구』.

와 일체감을 갖는 경우로서 문화적 동화 또는 문화 변용이라고 부를 수 있다. IV항의 경우는 물질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사회 적응에 실패하여 남한 사회에서 곁도는 주변화라고 부를 수 있다.⁴⁸⁾ 위의 표는 어디까지나 분석을 위해 현실을 단순화시킨 이념형으로서 적응의 정도가 성공이나 실패냐로 양분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탈북자의 적응 유형은 이보다 훨씬 복잡하고 다양하리라 생각한다.

앞에서 보았듯이 탈북자들의 사회 적응은 물질적인 측면과 정신적인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대다수의 탈북자들은 사회 적응 유형 중에 ‘부적응’ 또는 ‘주변화’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남한 사회에서의 부적응은 종종 일탈, 범죄 행위와 연결되기도 한다. 부적응 다음으로 일반적인 적응 유형은 ‘고립’이라고 볼 수 있는데, 탈북자 중에는 비록 경제적으로는 안정된 직장을 갖고 적절한 수준의 소득이 있어도 정신적으로는 북에 두고 온 혈육에 대한 죄책감, 북한의 테러 위협에 대한 공포감, 남한 주민들의 탈북자에 대한 편견과 차별로 인해 아직 남한 사회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다

48) 이러한 분석틀은 일찍이 베리가 캐나다와 같은 다인종 사회에서의 소수 민족의 민족 정체성에 관해서 ‘타인종·민족 집단과의 관계’와 ‘민족 정체성’의 상호 작용에 의해서 격리, 통합, 동화, 주변화라는 네 가지 형태로 구분한 것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것이다. J. W. Berry, “Finding Identity : Segregation, Integration, Assimilation or Marginality”, Leo Driedger(ed.), *Ethnic Canada : Identities and Inequalities*(Toronto : Copp Clark Pitman, 1987). 김두섭은 이 분석틀을 변용해서 캐나다 밴쿠버의 한국인들의 사회 문화적 적응 형태를 통합, 동화, 고립, 주변화로 구분한 바 있다. 이런 분석틀은 소수 민족의 정체성 연구에 기초한 것인데, 이것을 탈북자의 경우에 그대로 활용하는 데에는 탈북자의 특수성 때문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탈북자의 경우에는 그들의 기원지인 북한이 남한과 여전히 대립적인 관계에 있기 때문에 남북한 관계가 이들의 사회 적응과 정체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응을 물질적인 측면과 정신적인 측면으로 구분하여 이들간의 결합의 결과로 사회 적응의 유형을 구분하는 것은 여전히 유용하다고 생각한다. 김두섭, “중국인과 한국인 이민자들의 소수민족사회 형성과 사회문화적 적응 : 캐나다 밴쿠버의 사례연구”, 『한국연구학』, 제21권(1998).

보니 이들은 남한 주민들과 친밀한 일차적 관계를 맺지 못하고 사회에 대한 소속감도 갖지 못함으로써 또래 탈북자들끼리만 교제하는 경우가 발견된다. 이렇게 탈북자가 남한 주민과 하나가 되지 못하고 스스로 고립하게 되는 것은 탈북자 스스로의 적응 의지가 약하기 때문일 수도 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앞에서 지적한 대로 남한 주민들의 탈북자에 대한 비판적이고 차별적인 인식이라고 생각된다. 남한 주민들의 탈북자에 대한 그릇된 인식들로는 “얼마나 모질면 복에 처자식, 부모 형제를 두고 혼자만 잘살겠다고 오겠나?”, “한번 배반한 사람은 자꾸 배반하므로 믿지 마라”, “노력은 안하고 요구만 한다” 등이다. 이와 같이 남한 주민의 부정적이고 멸시적인 태도를 접하게 되면 탈북자들은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소외감을 갖게 되며 남한 사회의 일원이라는 귀속감을 갖는 데 장애 요인이 된다.

소수의 탈북자들만이 경제적·정신적 적응에 성공하고 있는데 이들의 대부분은 동유럽 유학생, 해외 주재 외교관, 외화벌이 요원 출신이다. 이들은 남한 사회에서도 적용될 수 있는 인적 자원을 갖고 있고 일찍이 자본주의 체제에 노출됨으로 인해 자본주의적 사고 방식과 행동양식을 갖고 있어서 적응의 속도가 빠른 사람들이다. 이들 가운데에는 대기업이나 공기업의 안정된 직장을 떠나 기업가로 변신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어서 탈북자들의 ‘자본주의적 인간’으로의 변신을 선도하는 계층이다. 또 한 가지 성공적인 적응 사례에 속하는 사람들의 상당수는 남한에서 대학 교육을 다시 받았거나 또는 처음부터 받은 사람이다. 이들은 4년간의 대학 교육 중에 남한 사회에서 생활하기에 필요한 상식, 전문 지식, 대인 관계의 요령을 터득하게 된다. 대학 학력에 힘입어 이들은 대기업이나 공기업의 사무직, 전문직에 종사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며, 근무 기간 중에 공식 조직의 운영 원리와 대인 관계의 기술을 터득하게 된다. 그러므로 이들이 회사를 나와서 자영업을 하더라도 이

때 습득한 경험과 동료와의 인맥이 후에 커다란 자산으로 작용한다.

위의 적응 유형을 통해서 우리는 물질적 적응이 정신적 적응의 충분 조건이 될 수는 없어도 필요 조건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탈북자의 사회 적응을 위해서는 우선 경제적 자립에 필요한 소득과 안정된 직장을 갖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며, 그와 함께 민간 단체(종교 단체, 사회 봉사 단체 등)나 일반 남한 주민과의 사회적 연결망을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통일부의 1998년 설문 조사에 따르면 친목 단체에 참여하고 있다고 응답한 탈북자가 전체 응답자 중 14%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져서 탈북자의 사회적 연결망 형성이 매우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⁴⁹⁾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의 설문 조사 결과 역시 탈북 여성들이 가족 외에 가깝게 지내는 사람이 정부 관계자, 다른 탈북자들, 종교인들이라고 밝힘으로써 사회 활동의 범위와 인간 관계가 매우 제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⁵⁰⁾ 남한에서 취업 경험이 있는 총 77명의 탈북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⁵¹⁾에서는 취업 정보를 수집할 때 주로 본인 스스로 찾거나 가족, 친구, 친지, 또는 담당 형사·통일부를 통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리고 자신에게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누구와 의논하는지를 살펴본 결과 주로 가족, 친척, 담당 형사, 동료 탈북 주민과 의논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남한 사회의 자원(직업 및 교육 기회, 친분 관계 등)에 연결될 수 있는 사회적 연결망의 확충은 필수적인 과제이다. 독일의 이주민 정책을 살펴보면 독일 정부가 시민 대학, 스포츠 동호회, 세미나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하여 이주민들과 현지주민들간에 친밀한 교제와 접촉을 늘리려고 노력한 것을 알 수 있다. 우리도 전국에 수많은 사회

49) 통일부, 『북한이탈주민 생활실태조사 분석결과 보고서』(미간행 보고서, 1998).

50)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북한이탈 여성주민 생활실태 조사결과 발표와 지원방안을 위한 토론회』(서울 :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1999), 21쪽.

51) 윤인진, 『북한이탈주민의 직장부적응 문제 조사 및 적응력 향상 방안 연구』.

교육 시설, 종교계의 사회 복지관 등의 시설을 활용하여 탈북자와 남한 주민간의 교제와 접촉을 적극적으로 주선하여 양자간에 편견과 고정 관념을 깨고 신뢰와 호감이 생기도록 해야 한다.

4. 요약 및 연구의 함의

본 연구에서는 탈북자에 관한 기존 연구의 한계와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그들의 탈북과 사회 적응의 과정을 통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모델을 개발하려고 하였다. 기존 연구의 문제점으로 지적한 것은 이론의 부재, 과학적 연구 방법론의 부재, 구체성 결여, 개념의 혼란 등이었다.

이론의 부재와 관련하여 기존 연구는 탈북자 문제의 실천적 해결과 정책 입안 차원에서 현상에 대한 객관적이고 심도 있는 분석과 진단의 측면이 부족했다. 앞으로 탈북자 연구가 학문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사회 과학적 연구와 접목하여 이미 축적된 사회 과학적 이론, 개념, 방법론 등을 활용하여 연구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일이 필요하다.

과학적 연구 방법론의 부재와 관련해서는 사회 과학적 연구 방법의 전문적 훈련 없이 사회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여과하지 않고 발표해 온 것이 탈북자 상황에 대한 일반인의 불신을 가져왔다. 또한 탈북자의 사회 적응은 다차원적이고 장기적인 현상임에도 불구하고 기존 연구는 단편적이고 횡단적으로 밖에 진행되지 못했다. 앞으로 이런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사회학, 심리학, 사회복지학, 정치학, 정신의학 등을 포함한 학제간 공동연구와 함께 동일한 연구 대상자를 여러

시점에서 반복해서 조사하는 종단적(longitudinal) 또는 패널 조사를 실행해야 한다. 이렇게 해서 수집된 자료는 일부 연구자들만이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베이스화해서 많은 연구자들이 다양한 주제를 다양한 시각에서 연구할 수 있게끔 하는 공동체 문화를 형성해야 한다.

탈북자 문제의 전문 연구자들이 부족한 상태에서 기존 연구는 탈북자들의 전반적인 사회 적응 수준과 문제점을 점검하는 총론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 그로 인해 아무리 탈북자 실태 조사가 반복되어도 연구의 축적이 미비해지고 탈북자 문제의 실질적인 해결에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앞으로는 탈북자의 사회 적응에 있어서 중요한 이슈들에 대해서 이슈별로 경험적이고 구체적인 연구를 통해 연구 결과를 축적해 나가고, 연구자의 전문화와 연구자간의 역할분담이 가속화되어야 할 것이다.

탈북자 연구에서 사용되는 개념과 용어의 혼란 역시 탈북자 연구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극복해야 할 과제이다. 탈북자를 호칭하는 용어 자체가 ‘탈북 귀순자’, ‘탈북 이주자’, ‘탈북 주민’, ‘북한 이탈 주민’ 등 다양하게 쓰이고 있다. 탈북자는 영어로 defector, refugee, escapee, border-crosser 등으로 역시 다양하게 표기되는데 각 용어가 의미하는 바와 정책적 함의가 서로 다른 문제가 있다. 따라서 탈북자 용어의 표준화를 위해서 연구자, 탈북자, 정부, 민간 단체가 공동으로 참여하여, 현실적인 국내외적 상황을 고려하면서 상호 공감할 수 있는 용어를 찾아내야 할 것이다.

기존 탈북자 연구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생각되는 것은 탈북과 사회 적응 현상을 통합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탈북자가 탈북을 결심하고 중국이나 러시아 등지로 월경을 하고, 일정 기간 체류를 한 다음 국내로 입국하고, 국내에서 사회 적응을 하는 과정들은 서로가 긴밀히 연결된 과정들(interlinked processes)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연구에서는 이러한 과정들의 연결 고리를 연구하지 못하고 개별적인 과정으로 분리하여 연구하였다.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탈북 이전 단계의 요인들, 제3국 체류 단계의 요인들, 국내 입국과 정착 단계의 요인들을 서로 긴밀하게 연관시켜 그것들간의 관련성을 분석하고, 각 단계에서의 경험이 결과적으로 사회 적응의 유형과 수준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탈북 이전 단계의 요인으로는 북한 사회의 구조와 특성, 외부 세계의 대응 자세, 탈북자의 특성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요인들이 탈북자의 규모, 탈북 동기, 계층 배경 등에 영향을 미친다. 일반 난민과 이민자들이 새로운 환경으로 이주하게 되면 기원지에서의 문화 유산(cultural bag)을 함께 가지고 간다. 동일한 의미에서 탈북자들은 남한 생활을 시작할 때 북한에서 교육받고 경험한 방식으로 남한 사회를 이해하고 적응을 시도하게 된다. 이때 북한식의 사고 방식과 행동 양식이 모두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지만, 남북한간의 구조적·문화적 차이로 인해 적응 초기 단계에 혼란과 장애가 발생하게 된다. 무엇보다도 북한에서 습관화된 국가에의 의존성, 육체 노동의 기피와 사무직의 선호, 강한 평등 의식 등이 남한에서 자신에게 현실적으로 주어진 기회 구조를 인정하고 받아들여려는 의식을 약화시키고 있다. 그리고 탈북 현상이 제도화되고 가속화되면서 다양한 연령층, 다양한 출신 지역, 다양한 사회 경제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국내로 입국하고 있다. 특히 가족 단위 입국자와 여성의 비율이 높아졌고, 10대 이하의 청소년과 50대 이상의 장년층 비율이 높아졌다. 이로 인해 탈북자들의 남한 사회 적응 유형이 더욱 다양화되고, 적응 과정에서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유형의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제3국 체류 단계의 요인으로는 탈북 경로, 탈북자 유형, 체류 경험 등을 들 수 있다. 이 단계에서의 육체적·정신적 외상은 국내 입국 후

건강 상태에 영향을 미치고, 대인 관계와 사회 적응에 악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이 단계 중에 자본주의 체제에서 통용될 수 있는 새로운 기술, 가치 체계, 생활 양식 등을 접하고 습득한 사람들은 남한 사회에서의 적응에 유리한 입장에 서게 된다. 그리고 이때 체류국에서 형성한 사회적 연결망이 국내에 입국한 후 대외 무역의 자원으로 활용되기도 한다.

국내 입국 및 정착 단계의 요인으로는 입국 당시 남한 사회의 수용 여건과 탈북자의 개인적 특성을 들 수 있다. 물론 개인의 인적 자본(교육 수준, 직업 경험, 직업 기술 등)이 남한 사회에서의 사회 적응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탈북자가 어느 시기에 입국했느냐 하는 것이 정착금, 취업 기회, 국민 여론 수준에 지대한 영향을 미쳐왔다. 이 두 가지 요인의 상대적 중요성을 검증하는 것이 현재의 연구 수준에서는 어려운 일이지만, 두 가지가 상호 작용을 거쳐 사회 적응의 수준을 결정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온당하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는 탈북과 사회 적응의 통합적 모델을 제시한 면에서 탈북자 연구에 일정 부분 기여하였다고 평가한다. 그러나 여전히 사회 적응과 같은 개념의 명확성과 조작화의 문제, 사회 적응의 유형 구분 문제, 사회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개별 변수들의 상대적 영향력 평가 등의 문제들이 해결되지 못한 채 남아 있다. 그리고 통합적 분석을 지향하면서도 단계별 요인을 병렬적으로 기술한 측면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들은 본 연구자의 앞으로의 과제로 삼고 지속적으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다.

본 연구는 탈북자 이외에도 일반 난민과 이민자 연구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연구 함의를 갖는다고 생각한다. 기존의 난민과 이민자 연구는 기본적으로 개인·가족·민족 공동체의 한 요인과 현지 사회와 노동시장의 한 요인 간의 상호 작용에 초점을 맞추었다고 볼 수 있다. 난민과 이민자의 거주국에서의 경제적 적응에 관한 대표적인 이론인 인적

자본 이론(human capital theory)과 분절 노동 시장 이론(또는 노동 시장 분할론, segmented labor market theory)은 노동 시장에서의 결과(취업, 소득, 고용 안정, 승진 등)를 설명할 때, 개인의 인적 자본과 노동 시장의 불평등 구조 중 어느 것이 더욱 중요한가에 대해서 강조점이 다른 것이다.⁵²⁾ 인적 자본 이론의 지나친 개인주의적 관점과 분절 노동 시장 이론의 지나친 구조주의적 관점으로부터 벗어나 민족 집단의 집단주의적 접근을 모색한 민족경제이론(ethnic economy theory) 역시 민족 집단의 자원 동원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에서 위의 두 이론과 맥락을 같이한다고 볼 수 있다.⁵³⁾

그런데 이런 이론들이 간과하고 있는 것은 국가 또는 정부의 역할이다. 비록 베트남 난민과 쿠바 난민의 경우에는 미국 정부가 이들의 입국 규모, 특성, 정착 지원의 수준과 내용에 영향을 미치기는 하였지만, 이들의 사회 적응은 기본적으로 개인, 가족, 민족공동체와 현지 사회와 노동 시장 간의 상호 작용의 결과로 이해되고 있다.

52) Peter Doeringer and Michael Piore, *Internal Labor Markets and Manpower Analysis*(Lexington, Mass. : Heath, 1971); Edna Bonacich, "A Theory of Ethnic Antagonism : The Split Labor Market",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37(1972); Gary S. Becker, *Human Capital : A Theoretical and Empirical Analysis, with Special Reference to Education*(New York :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1975); Richard Edwards, Michael Reich and David Gordon(eds.), *Labor Market Segmentation*(Lexington, Mass. : D. D. Heath and Company, 1975); Angelina Hoo-Yee Li, "Labor Utilization and the Assimilation of Asian Americans"(Ph. D. diss., University of Chicago, 1980); Barry C. Chiswick, "The Economic Progress of Immigrants : Some Universal Patterns", Barry Chiswick(ed.), *The Gateway : U.S. Immigration Issues and Policies*(Washington, D.C. : 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1982); Morrison Wong, "The Cost of Being Chinese, Japanese, and Filipino in the United States : 1960, 1970 and 1976", *Pacific Sociological Review*, 25(1982).

53) Alejandro Portes and Robert Bach, *Latin Journey : Cuban and Mexican Immigrants in the United States*(Berkeley and Los Angeles :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85); Robert M. Jiobu, "Ethnic Hegemony and the Japanese of California",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53(1988); Alejandro Portes and Min Zhou, "Gaining the Upper Hand : Economic Mobility among Immigrant and Domestic Minorities", *Ethnic and Racial Studies*, 15(1992).

그러나 우리 사회의 탈북자는 일반 난민이나 이민자와 구별되는 특수성을 갖고 있다. 남한과 북한이 여전히 대치하는 상황에서 탈북자는 단순한 난민과 이민자로 간주될 수 없는 점이 있다. 역대 정권이 바뀌면서 탈북자를 호칭하는 용어가 바뀐 것처럼 탈북자의 정체성은 정부에 의해서 규정되었으며, 이들과 남한 사회와의 관계성도 따라서 결정되었다. 정부는 또한 탈북자에 대한 정착 지원의 수준과 내용을 법으로 규정하였으며, 이러한 지원 수준의 시기적 변화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탈북자의 사회 적응의 수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정부는 단지 탈북자의 정체성만을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참여할 노동 시장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과거 군사 정권 시절에는 탈북자들이 귀순 용사로서 대우받았기 때문에 국유 기업체와 대기업에 취업할 수 있었고, 주택, 교육, 결혼 등의 생활영역에서 특혜를 받았다. 그러나 문민 정부 이후 이들의 군사적·정치적 가치가 상실되면서 이들은 생활보호 대상자의 자격으로 떨어졌고, 노동 시장에서 스스로의 힘으로 자립해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그러나 김대중 정부 이후 탈북자의 열악한 생활 여건이 사회 문제가 되자 취업 보호제, 생업 보호제, 영농 정착 지원 등 노동 시장에 개입하여 자립 정착의 물적 토대를 마련하려고 하였다. 이렇게 남한정부가 탈북자 문제에 중요한 행위자로서 개입하게 되는 이유는 남북한 관계의 특수성으로 인해 파생된 탈북자 지위의 특수성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우리가 탈북자 문제를 다룰 때 개인적 특성과 사회 구조적 특성 이외에도 정부의 역할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일반 난민과 이민자의 경우에는 탈북자의 경우처럼 정부의 역할이 두드러지지는 않는다. 그렇지만 정부는 여전히 난민과 이민자의 입국 규모, 특성, 사회 적응의 큰 틀을 결정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앞으로의 난민과 이민자의 연구에서 정부의 역할, 모국과 기원국 간의 정치 경제

적 관계 등 국제관계가 좀더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 문헌

- 강봉학, 『원수의 나라로』(서울 : 국민일보사, 1995).
- 김경만, “사회학 지식의 누적적 성장은 가능한가? : 미국과 한국사회학에 대한 과학사회학적 분석”(고려대학교 사회학 콜로키움에서 발표된 논문, 2000. 3. 27).
- 김귀옥, 『월남인의 생활 경험과 정체성 : 밑으로부터의 월남인 연구』(서울 :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0).
- 김두섭, “중국인과 한국인 이민자들의 소수민족사회 형성과 사회문화적 적응 : 캐나다 밴쿠버의 사례연구”, 『한국인구학』, 제21권(1998).
- 김명세, “탈북자의 사회적응은 민족화합의 예비과정”,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연구총서』, 2권(서울 : 오름, 1996).
- 김영수 · 정영국, 『탈북귀순자 남한사회 적응실태 조사』(서울 : 통일연수원, 1996).
- 김진윤 · 윤여상, “탈북주민의 사회 적응을 위한 단계별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 『'97 신진 연구자 북한 및 통일 관련 논문집』(서울 : 통일원, 1997).
- 김학성, “북한이탈주민(탈북이주자)의 남한사회적응에 관한 연구”(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정책학전공 석사학위논문, 2000).
- 김호, 『남녘으로 가는길』(서울 : 생명과 인권, 1998).
- 곽해룡, “중국에 있는 북한이탈주민 인권실태에 관한 연구 : 신(新)이산

- 가족 현상의 발생을 중심으로”, 『평화문제연구』, 제12권 1호 (2000).
- 독고순, “비교문화적 관점에서의 탈북주민 적응연구”(연세대학교 대학원 사회학과 박사학위논문, 1999).
- 민병천, “월남귀순자의 자유사회적응과정 실태조사”(국토통일원 조사연구실, 1980).
- 박요셉, “해외체류 탈북자 현황과 대책”, 『탈북자 문제 현황과 대책』(통일부·북한이탈주민지원 민간단체협의회 공동주최 워크샵, 2000).
- 박종철·김영윤·이우영, 『북한이탈 주민의 사회적응에 관한 연구 :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서울 : 민족통일연구원, 1996).
- 박현선, 『남북한 여성 사회통합 프로그램 연구 : 여성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력 제고 프로그램 개발』(서울 : 통일부, 2000).
- 박홍순, “북한인권문제의 국제화 방안”(북한인권시민연합 주최 제12회 북한동포의 생명과 인권 학술토론회 발표문, 1996).
- 북한인권시민연합, “탈북청소년의 사회적응능력 향상을 위한 통합적 지원프로그램”(미간행 연구 계획서, 2000).
- 선한승, 『북한 탈북노동자의 적응력 실태와 적응과제』(서울 : 한국노동연구원, 1995).
- 오혜정, “귀순북한동포의 남한사회 적응실태”(서강대 정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5).
- 옥태완 외, 『북한 급변사태시 대량난민대책』(서울 : 민족통일연구원, 1996).
- 윤여상, “중국동북지역 탈북자 실태와 지원방안”(북한인권시민연합 학술토론회 발표문, 1998).
- _____, “탈북자 적응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미간행 연구 논문, 1999).

- 윤인진, “탈북자의 남한사회 적응실태와 정착지원의 새로운 접근”, 『한국사회학』, 제33집(1999).
- _____, “북한이탈주민 자립·정착을 위한 자조모델 연구-효과적 자영업기반 형성을 중심으로”, 『'99 신진연구자 북한 및 통일관련 논문집』(서울 : 통일부, 1999).
- _____, 『북한이탈주민의 직장부적응 문제 조사 및 적응력 향상 방안 연구』(서울 : 통일부, 2000).
- 이금순, “북한대학원 접경지역 탈북자 실태조사단 보고문 토론”(미간행 토론문, 1999).
- 이기영, “탈북자 지원 민간단체와 정부와의 파트너쉽(partnership)연구”, 『'98 신진연구자 북한 및 통일관련 논문집』(서울 : 통일부, 1998).
- 이소래, “남한 이주 북한 이탈 주민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석사학위논문, 1997).
- 이영일, “탈북자 설문조사 보도자료”(미간행 보도 자료, 1998)
- 이장호, “남한 이주자(탈북자)의 사회적응을 위한 체계적 접근”, 『탈북자 지원을 위한 대책과 과제』(서울 : 크리스찬아카데미, 1996).
- _____, “북한 출신 남한이주자(탈북자) 문제의 사회통합적 대응”(크리스찬 아카데미 남북 관계 대화모임 발제문, 1996).
- _____, “북한출신 주민(탈북자 포함) 심리사회 적응 프로그램의 개발”, 『성곡논총』, 제28집 4권(1997).
- 이정우·김형수, 『탈북이주자 사회정착지원 개선방안』(서울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6).
- 이종훈, “북한 탈출동포의 보호문제”, 『현안분석』, 제80호(국회입법조사분석실, 1994).
- _____, “남한이주 북한동포 지원정책의 문제점과 정비방향”(국회입법

- 조사분석실, 1996).
- _____, “탈북 북한주민 정책의 문제점과 향후 과제”, 『중앙대학교 민족발전연구원 주최 통일정책 대토론회 발표 및 토론 자료집』(서울 : 중앙대학교, 1996).
- _____, “남한에 있는 탈북자들의 심리적 갈등 구조 및 그에 대한 해결 방안”, 『탈북자 문제 관련 국내워크숍 발표문』(탈북자 문제 관련 국내 워크숍 발표문, 1999).
- 이철우, “탈북 귀순자의 한국사회 적응력 제고에 관한 정책적 대응방안 연구”, 『통일정책분야 '96 북한 및 통일연구 논문집』(서울 : 통일원, 1996).
- 자유를 찾아온 북한인협회(자유북한인협회), “자유북한인(탈북자) 인권침해 방지 및 생활정착을 위한 공동 기자회견”(기자 회견 발표문과 참고자료, 1999).
- 장혜경 · 김영란, 『탈북자 가족의 사회적응과 여성의 역할』(미간행 연구 보고서, 2000).
- 전우택, “탈북자들의 주요 사회배경에 따른 적응과 자아 정체성에 관한 연구”, 『통일연구』, 제1권 2호(1997).
- _____, “남한에 있는 탈북자들의 심리적 갈등 구조 및 그에 대한 해결 방안”, 『탈북자의 보호 및 국내 적응 개선방안, 제32회 국내학술회의 발표논문집』(서울 : 민족통일연구원, 1999).
- _____, 『사람의 통일을 위하여』(서울 : 오름, 2000).
- 정영화, “북한이주민의 한국사회동화를 위한 법제도론”, 『통일연구』, 제2권(1997).
- 제성호, “북한탈출동포의 법적 지위와 처리방안”, 『북한연구』, 제5권 3호(1994).
- _____, “북한귀순자 보호 및 관리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형사정책

- 연구』, 제7권(1996).
- 좋은 벗들, 『두만강을 건너온 사람들』(서울 : 정토출판, 1999).
- 조백상, “해외체류 탈북자 문제 현황과 대책”, 『탈북자 문제 현황과 대책』(통일부·북한이탈주민지원 민간단체협의회 공동주최 워크샵, 2000).
- 통일부, 『북한이탈주민 생활실태조사 분석결과 보고서』(미간행 보고서, 1998).
- 통일부 인도지원국,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정책 추진현황”(2000. 6).
-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북한이탈 여성주민 생활실태 조사결과 발표와 지원방안을 위한 토론회』(서울 :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1999).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탈북이주자 사회정착지원 개선방안』(서울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8).
- Becker, Gary S., *Human Capital : A Theoretical and Empirical Analysis, with Special Reference to Education*(New York :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1975).
- Berry, J. W., “Finding Identity : Segregation, Integration, Assimilation or Marginality”, Leo Driedger(ed.), *Ethnic Canada : Identities and Inequalities*(Toronto : Copp Clark Pitman, 1987).
- Bonacich, Edna, “A Theory of Ethnic Antagonism : The Split Labor Market”,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37(1972).
- Chiswick, Barry C., “The Economic Progress of Immigrants : Some Universal Patterns”, Barry Chiswick(ed.), *The Gateway : U.S. Immigration Issues and Policies* (Washington, D.C. : 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1982).
- Doeringer, Peter and Michael Piore, *Internal Labor Markets and Manpower Analysis*(Lexington, Mass. : Heath, 1971).
- Edwards, Richard, Michael Reich and David Gordon(eds.), *Labor Market*

- Segmentation*(Lexington, Mass. : D.D. Heath and Company, 1975).
- Jiobu, Robert M., “Ethnic Hegemony and the Japanese of California”,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53(1988).
- Li, Angelina Hoo-Yee, “Labor Utilization and the Assimilation of Asian Americans”(Ph. D. diss., University of Chicago, 1980).
- Portes, Alejandro and Robert Bach, *Latin Journey : Cuban and Mexican Immigrants in the United States*(Berkeley and Los Angeles :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85).
- Portes, Alejandro and Min Zhou, “Gaining the Upper Hand : Economic Mobility among Immigrant and Domestic Minorities”, *Ethnic and Racial Studies*, 15(1992).
- Wong, Morrison, “The Cost of Being Chinese, Japanese, and Filipino in the United States : 1960, 1970 and 1976”, *Pacific Sociological Review*, 25(1982).

(Abstract)

North Korean Defectors and Their Social Adjustment : the Case for Defectors in South Korea

In Jin Yoon(Professor of Sociology, Korea University)

The main goal of this article is to point out the limitations and problems of current research on North Korean defectors and to develop a model that can explain more adequately their Diaspora experience. Current research suffers from the lack of theories, scientific research methods, specificity of research topics, and clarity of concepts and terms. To overcome these problems, the study of North Korean defectors needs to be brought into the realm of scholarly research and apply well-developed theories and methods of social sciences. In addition, there is also a need to delve into more empirical and specific issues and to cumulate these research findings.

The processes by which North Korean residents decide to cross the border, stay abroad, enter South Korea and undergo social adjustment are closely interlinked with each other. Current research on North Korean defectors, however, have not sufficiently examined such chains of processes and instead

have treated them as separate processes. For this reason, it is important to analyze how certain factors at the defector's pre-departure stage, the overseas stay stage, and the entry and adjustment stage are interrelated to each other, and how the experience at each stage affects the types and levels of social adjustment. The model developed in this study is to provide a synthetic analysis of the experiences of defection, overseas stay, and social adjustment of North Korean defectors.

Key Words : North Korean Defectors, Social Adjustment